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3년 가을호
Vol. 36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2023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재정통계 동향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센터 동향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CONTENTS

2023년 가을호

Vol. 36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지토계

VOL. 36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3년 가을호

-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양은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팀장(회계연구 총괄)
- 전화 044-414-2265(센터)
-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2023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 05 2023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6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8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9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 30 2023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재정통계 동향

- 34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43 『23~27년 공공기관 증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46 2022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57 2022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공익법인회계 동향

- 68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71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최종보고회 개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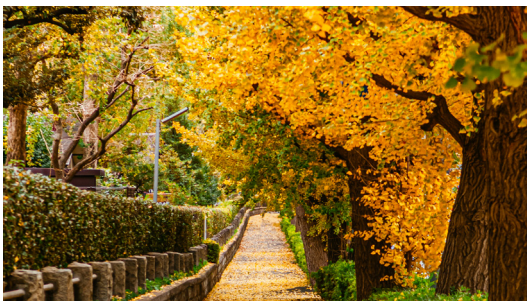
- 88 제3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센터 동향

- 74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 77 센터 연구 진행 동향
- 80 2023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8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보고회
- 8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 85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오피니언

- 102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공지사항

- 107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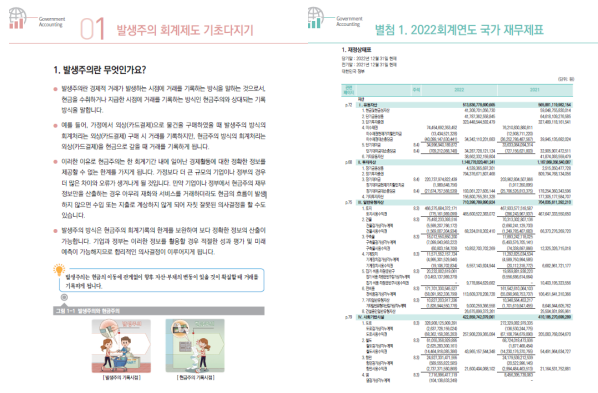
- 『2023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 2023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01 『2023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에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최초 발간한 이후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회계와 재무보고 시스템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지〉



〈내지〉

또한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제1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제2장 국가회계제도 이해하기, 제3장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제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제5장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로 구성되어 국가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별첨에는 2022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와 국가회계 실제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에 발간된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는 국가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 자산과 부채, 재정운영 등의 재무정보와 이러한 재무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특히 국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여 년간에 걸친 변화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 국가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책자는 2023년 9월에 배포되었으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02 2023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2023년 IPSASB 정례회의(2023. 9. 12., 스위스 취리히)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3. 9. 11.(월) ~ 2023. 9. 17.(일)
출 장 지: 스위스 취리히

나. 주요 내용

2023년 3분기 IPSASB¹⁾ 정례회의가 9월 중순 4일간에 걸쳐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9월 회의에서 IPSAS 개선 과제 중 ‘리스(lease)’, ‘측정(measurement)’,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와 관련된 최신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IPSASB 및 뉴질랜드 XRB(외부보고위원회)의 공공

1) IPSASB: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공공부문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 제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다. 세부 내용

1)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IPSASB는 2023년 1월에 ED 64 및 ED 75에 이어 리스 회계처리 개선을 위한 세 번째 공개초안인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을 발표하였다. ED 64, 리스는 IFRS 16, 리스에 대응하기 위한 IPSAS 13, 리스의 개정 공개 초안으로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단일의 사용권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D 75, 리스는 IFRS 16과의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사용권 모형을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ED 84는 리스 관련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인 할인리스 거래와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용권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며, IPSAS 43, 리스 및 IPSAS 23, 비교환거래 수익의 개정을 수반한다.

표 1 IPSASB의 단계별 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경과

| 개정 단계 |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
| [Phase 1] IFRS 16 기반 회계처리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6 기반의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모형 우선 적용 → 리스이용자: 사용권모형 리스제공자: 위험-보상 모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5, 리스 발표 및 의견수렴 IPSAS 43, 리스 발표('22. 1.) |
| [Phase 2]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발굴 위한 정보요청서(RFI),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 유사약정 발표 및 관련 사례 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인리스, 무상 사용권자산의 회계처리 개발 필요성 확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I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특유 이슈 관련 회계처리기준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발표('23. 1.) |

출처: 저자 작성

ED 84의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할인리스 거래의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 사용권자산 취득원가(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계약상 리스료 지급액보다 큰 할인리스인 경우 그 할인액을 IPSAS 23에 따라 비교환수익 또는 부채로 인식한다.
- (리스제공자)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에 따라 할인금융리스와 할인운용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라면 리스순투자와 기초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라면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무상 사용권자산 거래의 회계처리

- 무상 사용권자산을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구속력 있는 약정이 있을 때 IPSAS 23에 따라 비교환수익 또는 부채로 인식하되, 이때 무상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③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

- 판매후리스 거래 중 리스 거래(leaseback)에 내재된 할인액이 식별되는 경우 그 할인액을 리스제공자(구매자)는 IPSAS 43에 따라, 리스이용자(판매자)는 IPSAS 23에 따라 처리한다.

IPSASB는 2023년 6월 정례회의에서 ED 84에 대한 응답자 의견에 대한 개괄적 분석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개괄적 분석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ED 84의 제안 사항에 대해 동의 또는 부분 동의하였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ED 84에 대한 응답자 의견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응답자 의견 중 ED 84에 대한 부동의 근거와 보완 제안사항을 추출하여 각각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타 IPSAS 규정이 ED 84의 적용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또는 개발 중에 있는 IPSAS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표 2 ED 84에 대한 응답자 의견 분석 결과

| 구분 | 주요 내용 |
|-----------------------------|--|
| ED 84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적 근거(할인리스의 할인대여금·무상서비스·서비스할인과의 개념적 차이 등) • 적용범위(리스 및 계약의 용어 정의 수정 등) • 리스제공자의 할인리스 회계처리 • 리스이용자의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회계처리 |
| ED 84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으로 사용권을 이전하는 합의에 관한 지침 제공 • 공시사항 추가 • 할인리스 리스료의 현재가치의 비목적적합성에 관한 지침 추가 •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 '할인리스', '리스료', '시장'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필요 • 기초자산의 합의된 용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를 다루는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에 관한 지침 제공 |
| 타 IPSAS와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46, 측정(프로젝트 2단계) • IPSAS 47, 수익 • IPSAS 48, 이전비용(2023년 12월 논의 예정) |

출처: 저자 작성

Staff는 ED 84에 대한 응답자 의견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하였다.

- 리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제기된 바 없는 새로운 개념적 이슈는 수집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된 ED 84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 ED 84의 보완을 위한 제안사항은 필요에 따라 IPSASB가 재논의 가능성
- 응답자들이 ED 84의 사용권자산의 측정기준에 대해 충분한 지지 의견을 표명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COV 등 타 측정기준으로의 변경은 고려하지 않을 것

● 정례회의 의결사항

2023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Staff의 제안에 따라 ED 84의 사용권자산 및 무상 사용권자산의 회계처리 원칙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특히 2024년 3월까지 동 리스 프로젝트는 물론, IPSAS 47, 수익(Revenue)에 대한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PSASB는 올해 말까지 ED 84의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와 같은 비규정 문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 시사점

국가회계 예규 중 「리스 회계처리지침」,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에서 국가회계실체의 사용권 거래와 관련하여 그 측정방법을 다루고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리스 회계처리지침」은 리스의 정의²⁾를 통해 리스 거래가 국가회계실체가 사용권을 유상으로 획득하는 거래라는 점은 언급하고 있지만,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 모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만을 규정³⁾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권의 인식 및 측정 방법은 다루지 않는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과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가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같은 지침의 문단16 내지 문단24는 국가가 공사비의 일부만 부담한 경우 자산의 취득원가는 전체 공사비로 측정하되, 그중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은 문단5에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공정가액으로, 관련 사용수익권은 수증자의 무형자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⁴⁾

국가의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 원가로 측정하되 취득원가를 알 수 없다면 그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므로, 3개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거래에서 취득한 사용권은 취득 대가가 무상 혹은 유상인지에 따라 공정가액 또는 취득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즉 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원가로,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그 취득원가를 알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2) 문단3.(1)에서 리스를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음

3) 국가회계실체가 리스회사와 같이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음을 고려하여 리스 회계처리지침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만 규정함. 문단4는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리스 회계처리지침은 사용권 모형이 아닌 위험보상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실무적으로 당해 자산과 사용수익권은 민간투자비의 총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것으로 측정될 것임

IPSASB는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을 통해 사용권자산에 대해 단일의 측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D 84에 따르면 시장조건의 리스 거래나 할인리스 거래를 통해 사용권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는 물론, 리스가 아닌 구속력 있는 약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현재 용도에 기반한 시장요율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결과적으로 국가회계기준과 달리 ED 84는 사용권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그 간주원가를 구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ED 84의 사용권자산 측정방법은 첫째, 공공부문의 사용권자산의 경우 활성화된 시장이 없으며 실무적으로 공정가치에 내포된 최고 최선의 사용 가정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개념적으로 사용권자산의 가치가 기초자산을 현재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회계 역시 ED 84와 같이 사용권의 유·무상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권의 가치를 일원화된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측정(Measurement)

측정(Measurement)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Project Brief)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에서 2017년 3월에 승인되었으며,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측정 프로젝트의 1차 결과로서 개념체계의 부분 개정안과 새로운 IPSAS 기준서인 IPSAS 46, 측정(Measurements)을 2023년 5월에 공표하였다. IPSAS 46은 개별 IPSAS 기준서에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자산 및 부채의 측정과 관련된 기존의 용어와 개념을 종합하여 제공한다.

2023년 6월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서 '현행 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이하 COV)'의 타 IPSAS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공공부문에 특화된 현행가치 측정 기준인 COV는 "측정일 현재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공정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지난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공정가치와의 차이점에서 기반하여 도출된 COV의 개념적 원칙(Principles)과 적용원칙(Application of Principles)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는 타 IPSAS 기준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COV가 적용될 수 있는 IPSAS 기준서의 잠정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 바 있다. 2023년 3분기 정례회의에서는 COV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8개의 IPSAS 기준서 중 5개 기준서에 대한 COV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은 검토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3 IPSAS 기준서에 대한 COV 적용 가능성 검토 범위

| COV 적용 부적절 | COV 적용 가능 추정 |
|--------------------------|-------------------------|
| ① IPSAS 16, 투자부동산 | ①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 오류 |
| ②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 | ② IPSAS 12, 재고자산 |
| ③ IPSAS 27, 농업 | ③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
| ④ IPSAS 36, 관계실체·공동실체 투자 | ④ IPSAS 31, 무형자산 |
| ⑤ IPSAS 37, 공동약정 | ⑤ IPSAS 32, 민간투자사업 |
| ⑥ IPSAS 41, 금융상품 | ⑥ IPSAS 40, 공공부문 결합 |
| | ⑦ IPSAS 43, 리스 |
| | ⑧ IPSAS 46, 측정 |

출처: 저자 작성

■ IPSAS 12, 재고자산

IPSAS 12에 따르면,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후속 측정할 때 원칙적으로 그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되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과정에서 무상⁵⁾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그 원가와 현행 대체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⁶⁾

5) 명목상 대가만 받는 경우도 포함됨

6) IAS 2, 재고자산과 IPSAS 12, 재고자산의 대표적 차이점으로, IPSASB는 재고자산을 이러한 목적으로도 보유하는 것이 민간부문과 다른 공공부문의 특징으로 보고 있음

재무역량(financial capacity) 목적의 재고자산(예: 제품)의 경우 저가법 적용 시 판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적합하므로 유입가치 개념인 COV로 대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운영역량(operational capacity) 목적의 재고자산의 경우 저가법 적용 시 COV와 현행대체원가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현행대체원가는 COV와 개념적 원칙을 상당 부분 공유하므로⁷⁾ 이를 COV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IPSAS 12는 공공부문실체가 비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이 중 운영역량 목적의 재고자산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최초 측정 시에 COV로 측정하여야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

IPSAS 21은 비현금창출자산의 회수가능서비스금액(recoverable service amount, 이하 RSA)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RSA는 손상의 지표가 될 수 있다. RSA는 공정가치에서 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사용가치(잔여 서비스잠재력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되며, 이 중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COV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IPSAS 46, 측정에 따른 새로운 공정가치의 정의는 ‘최고 최선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데, IPSAS 21에 따른 RSA 측정(손상검사) 시에도 이러한 공정가치 전제가 적절한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전문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비전문화된 비현금창출자산의 경우 시장접근법⁸⁾ 사용 시 공정가치 산정이 용이할 수 있다. 전문화된 비현금창출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시장정보 관측이 어려운 경우 원가접근법⁹⁾ 사용이 적절하다.

7) 현행대체원가(current replacement cost)는 유입가치(entry value) 개념이며 현재용도(existing use)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와 공통점을 갖고 있음

8) 시장접근법은 동일 혹은 유사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되는 가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사용함

9) 원가접근법은 COV의 측정기법으로서, 대체 자산의 취득·건설·개발을 통해 특정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대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반영함

결과적으로, 일부 비전문화된 비현금창출자산의 경우 그 손상 여부 판단에 공정가치가 여전히 목적적합할 수 있으므로 RSA 측정 시 공정가치를 사용하되, 공정가치의 정의를 IPSAS 46의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RSA 측정 시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COV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 COV는 해당 자산의 현재 성능·상태·용도·위치를 전제할 때 잔여 서비스 잠재력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실제 입장에서 금액을 반영하므로 사용가치와 그 특징을 상당 부분 공유한다.
- 후속 측정 관련 현행가치 모형을 채택한 실체의 경우, 운영역량 목적의 자산을 IPSAS 45, 유형자산에 따라 COV로 후속 측정하여 표시할 것이므로 COV가 RSA 측정에 사용된다면 효율적인 손상검사가 가능할 것이다.

■ IPSAS 40, 공공부문 결합

IPSAS 40은 개별 사업(operations)을 하나의 공공부문 실체로 모으는 공공부문의 결합 거래를 병합(amalgamation)과 취득(acquisition)으로 구분하며 각각 수정 지분통합법과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지분통합법은 수취자산과 인수부채, 결합된 사업에 대한 비지배분을 관련 IPSAS(예: IPSAS 45, 유형자산)의 규정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므로, 결합 당시 식별된 수취자산은 이미 COV로 측정되어 있었을 것이며 후속 측정할 때에도 COV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법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취득한 사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차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는 IFRS 3, 사업결합과 일관성을 가지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한다.

■ IPSAS 32, 민간투자사업

IPSAS 32는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자산을 최초 측정할 때 그 공정가치로 측정 하되,¹⁰⁾ 그 이후에는 당해 자산과 관련된 IPSAS(예: IPSAS 45, 유형자산)에 따라 분류 및 후속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양허자(grantor)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보유 목적은 양허자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운영역량을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을 후속 측정할 때는 COV가 개념적으로 적절한 측정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 IPSAS 43, 리스

IPSAS 43은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을 역사적 원가 모형으로 후속 측정하도록 한다. 다만 사용권자선이 IPSAS 16, 투자부동산에 따른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와, 리스이용자가 현행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 유형자산 중 하나의 유형과 사용권자선이 연관된 경우에는 현행가치 모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실체가 자산을 구매하였다면 IPSAS 45, 유형자산을 적용하여 그 보유 목적에 따라 공정가치(재무역량) 또는 COV(운영역량)¹¹⁾으로 측정한다. 자산을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한 경우에도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리스계약에 따라 임차하는 기초자산은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실체의 운영역량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용권자선은 COV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정례회의 의결사항

IPSASB는 9월 회의에서 현행 IPSAS 기준서들에 대한 COV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1차 검토한 결과, IPSAS 3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대상인 자산의 경우 COV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IPSAS 12, 채고자산 및 IPSAS 43, 리스의 적용 대상인 자산의 경우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

10) 양허자의 현재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11) 실체가 당해 유형자산에 현행가치 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것을 전제로 함

하였다. 또한 IPSASB는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의 RSA(회수가능서비스 금액)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Staff에게 올해 12월 정례회의 이전에 RSA와 관련된 적용사례를 개발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 시사점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를 통해 자산의 측정기준을 공공부문실체의 자산 보유 목적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로 개발된 COV는 “측정일 현재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로서 공공부문실체가 운영역량(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을 평가하는 데 적용되는 측정 기준이다.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서 현행 IPSAS에 따른 자산 측정기준 중 COV로 대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IPSAS 32, 민간투자사업의 적용 대상 자산이 운영역량 목적,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임에 따라 COV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가회계 예규 중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 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이 예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자산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취득한 것은 민간투자비로 최초 측정한다고 규정한다. 후속 측정은 적용범위 문단에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국한됨을 시사한다. 즉, 국가회계의 민간투자사업 자산의 보유 목적이 현금창출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자산은 IPSASB의 COV 개념을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자산의 유형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IPSASB는 무형자산 등 총 8개의 IPSAS 기준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므로 국가의 전체 자산 유형에 대한 COV의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3)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바탕으로 2000년 5월에 개발된 이후 2006년 12월에 최초 개정된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개념체계)** 2014년에 발표된 개념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음
- **(IAS 1 개정사항)** 현행 IAS 1의 경우 2007년 기준서 개정,¹²⁾ 2014년·2021년 주석공시정책 프로젝트 결과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기준서로 대체 예정¹³⁾
- **(GFSM 2014)** IPSAS 1 개발 및 후속 개정 시 GFS와의 관계를 검토하지 않음

IBSASB는 2021년 7월부터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2019~2023 업무계획서 내 잠정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를 업무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2023년 6월 정례회의에서는 'IPSAS 1의 대체를 통한 재무정보 전달의 개선'을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목표로 설정하여, 적용범위와 최종산출물 자문보고서 절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범위)** IPSAS 1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주식 포함) 및 IPSAS 2, 현금흐름표와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등 타 기준서에 대한 후속 개정사항
- **(최종 산출물)** IPSAS 1을 대체하는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 발표

12) 2007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유주 지분변동 및 포괄이익의 표시 개정, 재무제표의 제목과 관련된 용어 변경 등이 있음

13) IASB는 2024년 상반기 중에 IAS 1을 대체하는 신규 기준서 발표를 목표로 주요 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 (주요 이슈) 개념체계와의 일관성, 재무제표상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 식별, GFS와의 정합성, IFRS와의 정합성
- (자문보고서) 자문보고서 단계에 예시 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포함

2023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우선 IPSAS 22, 일반정부 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및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와 관련된 교육 세션을 가졌다. 그밖에 지난 6월 정례회의 논의 결과가 반영된 프로젝트 개요(안)(draft Project Brief)에 대해 섹션별로 검토하고, 자문보고서 및 예시 공개초안 개발 완료 이전까지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와 각 이슈별 논의 일정표에 대해 심의하였다.

● 정례회의 의결사항

2023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프로젝트 개요를 승인 하되,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 범위를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의 적용 범위로 국한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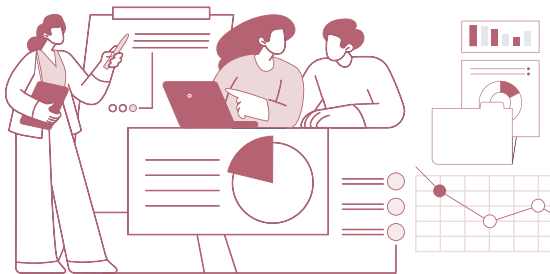
● 시사점

IPSASB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련된 기준서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제적인 회계기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IPSASB가 언급한 주된 프로젝트 추진 배경은 IPSAS 1, 재무제표 표시의 참조 대상인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 반영과 2014년에 발표된 IPSASB 개념체계와의 정합성 검토이지만, 주목할 점은 IPSASB가 동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재정통계지침(GFSM)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발생주의 재무제표의 표시 정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IPSASB가 성격이 서로 다른 재무보고서라 할 수 있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정부재정통계의 관계에 대해 고려하는 이유는 각종 재무보고서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정보이용자가 공공부문 재무정보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결산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결산 체계개편 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국가결산 체계개편 과제의 결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는 물론 주석으로 공시되는 정보의 형태와 성격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가결산 체계개편 과제의 범위가 재정상태표 간소화,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 현금흐름표 신설로 국한되어 있어 체계개편의 결과가 현행 계정과목의 틀 안에서 이들을 통합 또는 분리하거나 명칭을 개선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결산보고서가 보다 효과적인 재정관리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개편 후 재무제표의 표시 정보가 IPSAS와 GFSM과 같은 국제적인 재무보고기준에 따른 것과 최대한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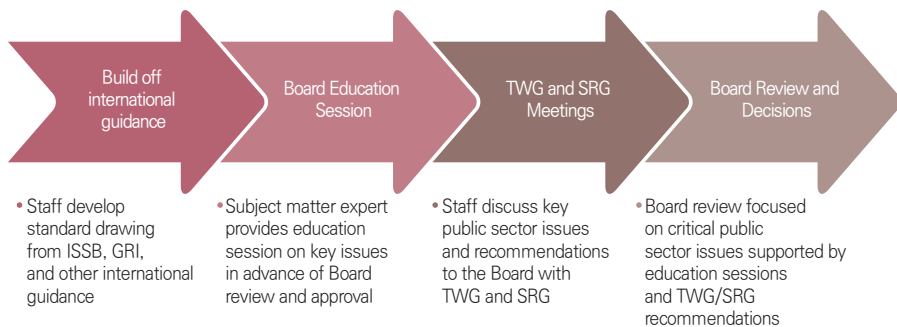


4)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프로젝트의 프로젝트¹⁴⁾ 개요를 승인하였다.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 사항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PSASB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등 타 기준제정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 조직으로서 Climate-related Topic Working Group(TWG), 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SRG) 등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Staff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SRS X, Climate-related Disclosures)의 개발 과정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서의 공개초안 승인 및 2025년 말 기준서 발표를 최종 목표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① 지침(안) 개발 ② 교육세션 개최 ③ TWG·SRG 회의 개최 ④ 안전 검토 및 의결 과정을 매 분기 반복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1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의 개발 과정



출처: IPSASB Meeting Agenda Item 13 - Climate-related Disclosures

14) IPSASB는 자문보고서(CP),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2022년 5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는데, 이해관계자들은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임을 고려할 때 확장성, 파급효과, 긴급성 및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하였음

① 지침(안) 개발

ISSB, GRI 및 기타 국제 지침을 기반으로 기후 관련 공시 지침(안) 마련

② 교육세션 개최

지침(안) 심의에 앞서 ISSB, GRI, XRB 등 국제적인 기준제정기구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교육 선행

③ TWG 및 SRG 회의 개최

- Topic Working Group 회의와 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및 IPSASB에 대한 권고사항 개발
- Staff는 TWG와 SRG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기 위한 기구 (Sustainability Implementation Forum, 이하 SIF)도 설치 추진

표 4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관련 설치 예정인 자문기구 및 심의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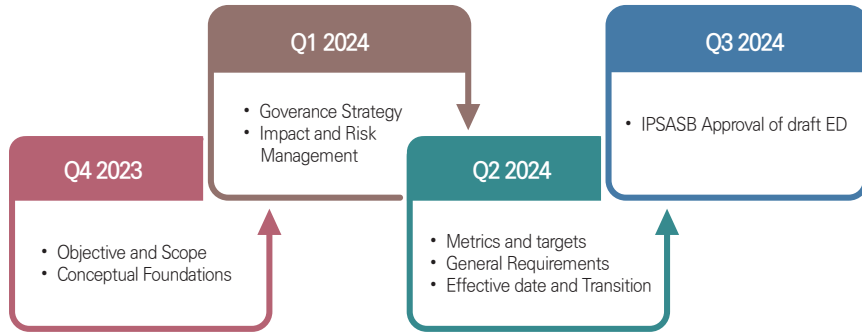
| 구분 | Climate TWG | SRG | SIF |
|------|--|---|---|
| 역할 | • 전문적·구체적 논의 및 권고 | • 개괄적·전략적 조언 제공 | • 의견 수렴 • 주요 이행이슈 논의 |
| 구성 | • Ian Carruthers(의장), • Liang Yang(IPSASB 대표) •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ISSB, GRI 등) 대표자 • 각국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HM Treasury 등) 대표자 | • Scott Showalter(의장) • UNCEEA, OECD, World Bank 등 11개 기구 대표자 • 회계법인 토론체 • SEC(observer) | • 재무제표 작성자 • 기준 제정자 • 감사인 • 기타 참여희망자 |
| 회의주기 | • 분기당 2회 • 첫 회의는 10/18 예정 | • 분기당 1회 • 첫 회의는 10/4 예정 | • 필요시 개최 • 첫 회의는 2024년 예상 |

출처: 저자 작성

④ 안건 검토 및 의결(IPSASB 정례회의)

- 교육세션 및 TWG·SRG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핵심 이슈 검토 및 의결

그림 2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의 개발 일정



출처: IPSASB Meeting Agenda Item 13 – Climate-related Disclosures(PPT)

● 정례회의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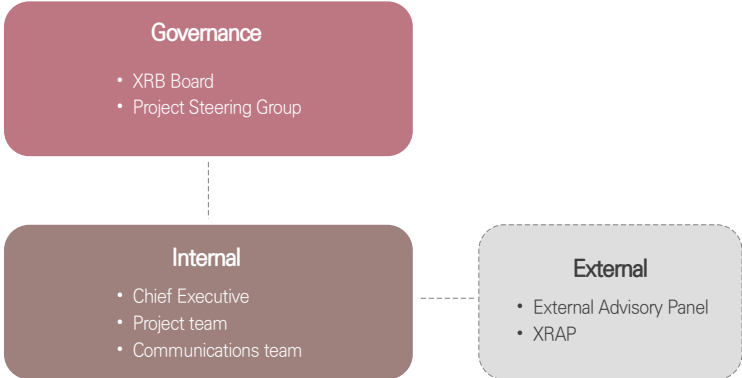
2023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Staff의 제안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의 개발 계획을 승인하였다.

●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사례(교육세션)

뉴질랜드 외부보고위원회(External Reporting Board, 이하 XRB) 위원장인 April Mackenzie를 IPSASB 9월 정례회의에 초청하여 뉴질랜드의 기후 관련 공시의 개발 과정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였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0년 9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1년 10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후 관련 기준서의 발표에 관한 법적 의무와 권한이 XRB에 부여되었다. 이에 XRB는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climate-related disclosure framework for Aotearoa New Zealand)를 2022년 12월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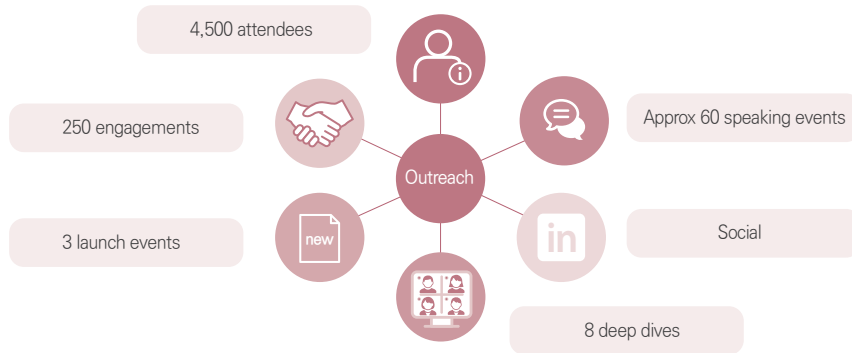
표 5 XRB의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의 개발 원칙 및 지원기구

| 구분 | 주요 내용 |
|-------|--|
| 개발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을 준수할 것(예: 목적적합성, 충실한 표시 등) • NZ CS 1은 원칙 중심의 간결한 기준서로 구성하되, 구속력 없는 사례별 지침을 수록할 것 • 기준서와 지침 개발 시 원칙적으로 TCFD 권고사항에 기반할 것 • 기준서와 지침 개발 시 현재 혹은 잠재적 이용자 요구에 초점을 맞출 것 • 지속가능성 관련 XRB 업무에 대한 마오리족과의 협의를 체계 수준에서 명시할 것 |
| 역할 분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공시 체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개의 그룹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XRB Project Steering Group → 기준서 제정 관련 가이드 제공 ② External Advisory Panel → 특정 전문사안에 대한 조언 제공  <pre> graph TD subgraph Governance G1[XR Board] G2[Project Steering Group] end subgraph Internal I1[Chief Executive] I2[Project team] I3[Communications team] end subgraph External E1[External Advisory Panel] E2[XRAP] end Governance -.- Internal Internal -.- External </pre> |

출처: Developing Aotearoa New Zealand’s Climate Standards(XRB)

이 과정에서 XRB는 기준서(안)의 섹션별로 관계자에 대한 공식 자문은 물론, 언론 및 행사를 통한 비공식 자문, 심층분석 웨비나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과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3 XRB의 기준서 개발 활동 결과 요약



출처: Developing Aotearoa New Zealand's Climate Standards(XRB)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의 구성 및 이에 따른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 XRB의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서로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NZ CS 1 Climate-related Disclosures NZ CS 2 Adoption of Aotearoa New Zealand Climate Standards NZ CS 3 General Requirements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
| NZ CS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체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고려할 수 있는 공시 체계 제공 [거버넌스] 식별된 거버넌스 주체, 거버넌스 주체의 감독에 관한 설명,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전략]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최소 3개), 현재 및 예상되는 영향, 실체의 대응방법 [위험 관리]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평가·관리 절차, 종합적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 통합 방안 [수치 및 목표] 수치의 유형, 산업기반 수치, 주요 성과지표, 목표 및 목표 대비 성과 |
| NZ CS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공시 체계의 선택적 적용에 관한 규정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번째 보고기간까지 적용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NZ CS 1의 '전략' 관련 현재 및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전환 계획 NZ CS 1의 '수치 및 목표' 관련 온실가스배출(범위3) NZ CS 3의 수치 비교 정보 두 번째 보고기간까지 적용 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NZ CS 3의 온실가스배출(범위3)의 비교 정보, 추세 분석 |
| NZ CS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 관한 원칙 및 보편적 요구사항 규정 [정보의 질적특성] 목적적합성, 정확성, 검증 가능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 (consistency), 적시성 [정보의 표시] 정보 균형, 이해 가능성, 완전성, 일관성(coherence) [일반 요구사항] 공시 위치, 보고실체 및 보고기간, 가치사슬, 중요성, 비교 가능 정보, 방법 및 가정, 추정의 불확실성 |

출처: 저자 작성

XRB는 기후 관련 공시 체계의 품질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다개년 유효성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부터 기준서들에 대한 사후이행 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를 개시할 계획이다.

● 시사점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2025년 말까지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SRS X, Climate-related Disclosures)를 개발하고 발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담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들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신규 IPSAS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IPSAS의 유지보수에 치중함으로써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을 차기 5개년 전략 및 업무계획서¹⁵⁾에 명시할 예정이다.

IPSASB가 이와 같이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 일정을 단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뉴질랜드 XRB의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 (climate-related disclosure framework for Aotearoa New Zealand) 발표를 성공적인 선행 사례로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XRB는 2000년 9월 기후 관련 보고를 의무화한 이후 2022년 12월까지 2년 여의 기간에 걸쳐 3개의 기준서로 구성된 뉴질랜드 기후 관련 공시 체계를 개발하여 발표한 경험이 있다.

XRB는 기후 관련 공시 체계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XRB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과 공시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뉴질랜드의 사례 및 IPSASB의 추진 과정을 참고하여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5) 2024-2028 Strategy and Work Program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 2023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01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①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②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③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④ 내부거래 제거 ⑤ 건설중인자산 적정성 ⑥ 계정과목 선택 오류(총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간 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월 1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 동향 및 중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중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방법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02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2022년에 발간했던 『2022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편람』 개정사항 및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한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연례적 지적사례 20선’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지적사례 20개를 연례적 지적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술하였다.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91%가 연례적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이를 활용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디브레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 (<https://gafsc.kipf.re.kr>)나 디브레인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03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9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 3~9차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전국 7개 주요 도시(서울(2회, 1개 차수는 을지훈련 일정과 겹침으로 8월에서 10월로 연기됨), 광주, 대전, 부산, 제주, 대구, 세종)에서 9회차의 과정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각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장소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강원대학교의 정광화 교수, 순천대학교의 엄기중 교수,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차수별로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 윤성회계법인의 이소정 회계사, 이촌회계법인의 방민식 회계사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회계법인의 허웅 회계사가 세입세출 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오전 시간은 수입·지출(1, 2, 4, 5, 6, 7, 9차)과 국유·물품(3, 8, 10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 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센터 소속 회계사들이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마지막 과정은 ‘국가재무제표 들여다 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성삼경회계법인의 모원수 회계사가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하며 전체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04 2023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실무 ② 결산 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이론 과정의 중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는 집합교육 방식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과정을 구성하였다. 재무결산실무는 2개 차수가 집합교육과 비대면 방식으로 각 2일간,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1차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1일간 진행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들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 1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 지역 | 일정 | 시간 | 교육방식/장소 | 정원 |
|----|-------------------------|---------------|-------------|------|
| 세종 | 10. 12.(목) ~ 10. 13.(금) | 10:00 ~ 17:3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00명 |
| 무관 | 10. 26.(목) ~ 10. 27.(금) | 10:00 ~ 17:30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 120명 |

표 2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 일자 | 교육 과목 | 시간 | 주요 내용 |
|-----------------------|----------|--------------------|------------------------|
| 1일차 | 재무결산의 이해 | 1.5 | 1.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 |
| | | |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
| | | | 3.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
| 4.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 | |
|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 2.0 | 1.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 |
| | |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 |
| | |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 |
| 4.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 | | |
| 감사원 지적사례 | 2.5 |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 |
| | | 2. 주요 감사원 지적사례 | |
| 2일차 | 내부거래실무 | 1.5 | 1. 내부거래의 의의 |
| | | | 2. 내부거래 제거방식 |
| | | |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
| 결산조정분개 | 2.0 |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 |
| | |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 |
| 결산보고서 작성 | 2.5 | 1. 결산작성지침 개요 | |
| | | 2. 결산보고서 생성 | |
| | | 3. 결산보고서 발행 | |

표 3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일정

| 지역 | 일정 | 시간 | 교육방식 | 정원 |
|----|-----------|---------------|-------------|------|
| 무관 | 11. 2.(목) | 10:00 ~ 17:00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 100명 |

표 4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커리큘럼

| 일자 | 교육 과목 | 시간 | 주요 내용 |
|-------------|----------------------------------|-----|---|
| 1 일 차 |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 1.0 |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
| |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 3.0 |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
| |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 2.0 |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





재정통계 동향



-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2022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 2022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01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23~'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가. 「2024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 29일(화)에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재정 수요가 높은 핵심 정책과 제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재정 정상화의 일환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민생 안정, 국가 경쟁력 제고 등 꼭 필요한 분야와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투자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1) 재정 총량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1조원(△8.3%) 감소하고,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5조원(8.7%) 증가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13.6조원(△2.2%) 감소한 612.1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 등 복지분야 지출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9조원(2.3%)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4대 증점투자 분야, 민생 경제 회복 지원, 국정성과 창출 등에 대한 지출로 10.3조원(3.5%) 증가하여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2조원(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는 각각 △1.9%, △3.9%로 전년 대비 1.3%p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0%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2024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 ¹⁾ (A) | 2024년 ¹⁾ (B) | 증감 | |
|----------|-------------------------|-------------------------|----------|------|
| | | | (B-A) | % |
| ◇ 총수입 | 625.7 | 612.1 | △13.6 | △2.2 |
| - 국세수입 | 400.5 | 367.4 | △33.1 | △8.3 |
| - 국세외수입 | 225.2 | 244.7 | 19.5 | 8.7 |
| ◇ 총지출 | 638.7 | 656.9 | 18.2 | 2.8 |
| - 의무지출 | 340.3 | 348.2 | 7.9 | 2.3 |
| - 재량지출 | 298.4 | 308.7 | 10.3 | 3.5 |
| ◇ 통합재정수지 | △13.1 | △44.8 | △31.7 | |
| (GDP 대비) | (△0.6%) | (△1.9%) | (△1.3%p) | |
| ◇ 관리재정수지 | △58.2 | △92.0 | △33.8 | |
| (GDP 대비) | (△2.6%) | (△3.9%) | (△1.3%p) | |
| ◇ 국가채무 | 1,134.4 | 1,196.2 | 61.8 | |
| (GDP 대비) | (50.4%) | (51.0%) | (+0.6%p) | |

주: 1) 2023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24년은 예산안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중 2024년 예산안 전체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의무·재량지출 추가 작성. 의무·재량지출은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재정 지출' 참조

2) 분야별 자원배분

「2024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에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분야별 자원배분을 실시하였다.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투자 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일자리 확대로 전년 대비 지출이 7.5%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수준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지원 제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D 분야의 경우 전반적인 사업 점검 및 구조조정을 통해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할 예정이며, 전년 대비 지출은 16.6% 감소할 예정이다.¹⁾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4.9%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수출 드라이브 추진 정책과 해외투자 및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약자보호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 지원,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등을 확대할 전망이다.

SOC 분야에서는 수도권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 개통 및 미래 모빌리티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유지 보수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지출이 4.6% 증가할 예정이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ODA 확대(3.6조→5.0조원), UN 안보리 활동,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5%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 분야의 경우 첨단 기반 전투력 강화 및 병 봉급 인상 등과 같은 병영환경 개선에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지출이 4.5% 증가할 전망이다.

1) R&D 분야 지출 감소액 중 일부(1.8조원 규모)는 교육·기타 부문 R&D 총량 중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된 것에 기인함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경우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지출이 6.1%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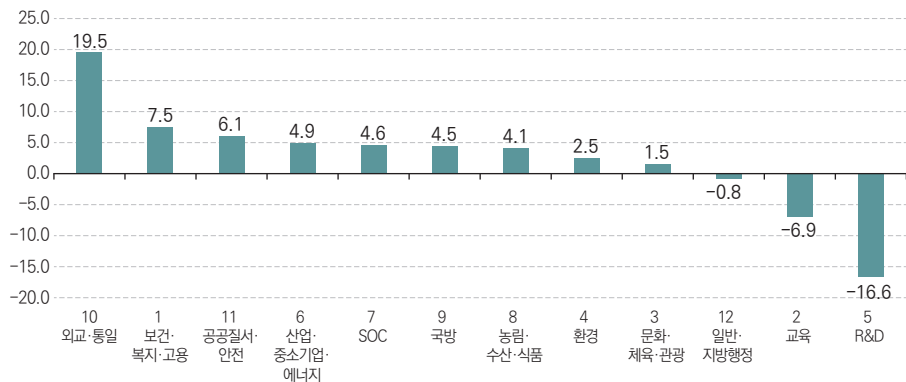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 본예산(A) | 2024년 정부안(B) | 증감(B-A) | 증감률 |
|----------------|-----------------|-----------------|---------|-------|
| ◆ 총지출 | 638.7 | 656.9 | 18.2 | 2.8 |
| 1. 보건·복지·고용 | 226.0 | 242.9 | 16.9 | 7.5 |
| 2. 교육 | 96.3 | 89.7 | △6.6 | △6.9 |
| 3. 문화·체육·관광 | 8.6 | 8.7 | 0.1 | 1.5 |
| 4. 환경 | 12.2 | 12.6 | 0.3 | 2.5 |
| 5. R&D | 31.1 | 25.9 | △5.2 | △16.6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6.0 | 27.3 | 1.3 | 4.9 |
| 7. SOC | 25.0 | 26.1 | 1.1 | 4.6 |
| 8. 농림·수산·식품 | 24.4 | 25.4 | 1.0 | 4.1 |
| 9. 국방 | 57.0 | 59.6 | 2.6 | 4.5 |
| 10. 외교·통일 | 6.4 | 7.7 | 1.2 | 19.5 |
| 11. 공공질서·안전 | 22.9 | 24.3 | 1.4 | 6.1 |
| 12. 일반·지방행정 | 112.2 | 111.3 | △0.9 | △0.8 |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23.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1 분야별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23.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나.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 29일(화)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포함 5개 회계연도에 대해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재정수입은 2023년 625.7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2024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나(612.1조원),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2027년 722.3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3년 638.7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2027년 736.9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GDP 대비 $\Delta 0.6\%$ 에서 2024년 $\Delta 1.9\%$ 수준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나, 2027년에는 $\Delta 0.5\%$ 수준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2023년 $\Delta 2.6\%$ 에서 2024년에는 $\Delta 3.9\%$ 로 적자가 증가하나, 2027년에는 $\Delta 2.5\%$ 수준으로 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7년까지 GDP 대비 5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2023~2027년 중기 재정총량

(단위: 조원, %)

| 구분 | 2023년 ¹⁾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재정수입 | 625.7 | 612.1 | 661.5 | 692.0 | 722.3 |
| 재정지출 | 638.7 | 656.9 | 684.4 | 711.1 | 736.9 |
| 통합재정수지 | △13.1 | △44.8 | △22.9 | △19.2 | △14.6 |
| (GDP 대비, %) | △0.6 | △1.9 | △0.9 | △0.7 | △0.5 |
| 관리재정수지 | △58.2 | △92.0 | △72.2 | △69.5 | △65.8 |
| (GDP 대비, %) | △2.6 | △3.9 | △2.9 | △2.7 | △2.5 |
| 국가채무 | 1,134.4 | 1,196.2 | 1,273.3 | 1,346.7 | 1,417.6 |
| (GDP 대비, %) | 50.4 | 51.0 | 51.9 | 52.5 | 53.0 |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편집

2)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재정수입은 2024년 감소세로 인하여 당초 2022~2026년 계획상 예측경로(연평균 증가율 6.6%)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연평균 증가율 3.7%)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3.6%(‘23년 본예산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계획에서 제시한 2022~2026년 5개년 평균 증가율 4.6%(‘22년 본예산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계획 대비 2023~2027년 계획상 재정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표 4 중기 재정총량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연평균 증가율 |
|----------------|---------------------------|---------|---------|---------|---------|---------|---------|------------|
| 재정 수입 | '22~'26년 계획 ¹⁾ | 553.6 | 625.9 | 655.7 | 685.6 | 715.2 | - | 6.6 |
| | (증가율) | (14.7) | (13.1) | (4.8) | (4.6) | (4.3) | - | |
| | '23~'27년 계획 ²⁾ | - | 625.7 | 612.1 | 661.5 | 692.0 | 722.3 | 3.7 |
| | (증가율) | - | (13.0) | (△2.2) | (8.1) | (4.6) | (4.4) | |
| 재정 지출 | '22~'26년 계획 ¹⁾ | 607.7 | 639.0 | 669.7 | 699.2 | 728.6 | - | 4.6 |
| | (증가율) | (8.9) | (5.2) | (4.8) | (4.4) | (4.2) | - | |
| | '23~'27년 계획 ²⁾ | - | 638.7 | 656.9 | 684.4 | 711.1 | 736.9 | 3.6 |
| | (증가율) | - | (5.1) | (2.8) | (4.2) | (3.9) | (3.6) | |
| 통합 재정 수지 | '22~'26년 계획 ¹⁾ | △54.1 | △13.1 | △14.0 | △13.7 | △13.4 | - | |
| | (GDP 대비) | (△2.5) | (△0.6) | (△0.6) | (△0.6) | (△0.5) | - | |
| | '23~'27년 계획 ²⁾ | - | △13.1 | △44.8 | △22.9 | △19.2 | △14.6 | |
| | (GDP 대비) | - | (△0.6) | (△1.9) | (△0.9) | (△0.7) | (△0.5) | |
| 관리 재정 수지 | '22~'26년 계획 ¹⁾ | △94.1 | △58.2 | △58.6 | △57.4 | △56.6 | - | |
| | (GDP 대비) | (△4.4) | (△2.6) | (△2.5) | (△2.3) | (△2.2) | - | |
| | '23~'27년 계획 ²⁾ | - | △58.2 | △92.0 | △72.2 | △69.5 | △65.8 | |
| | (GDP 대비) | - | (△2.6) | (△3.9) | (△2.9) | (△2.7) | (△2.5) | |
| 국가 채무 | '22~'26년 계획 ¹⁾ | 1,064.4 | 1,134.8 | 1,201.2 | 1,271.9 | 1,343.9 | - | |
| | (GDP 대비) | (50.0) | (49.8) | (50.6) | (51.4) | (52.2) | - | |
| | '23~'27년 계획 ²⁾ | - | 1,134.4 | 1,196.2 | 1,273.3 | 1,346.7 | 1,417.6 | |
| | (GDP 대비) | - | (50.4) | (51.0) | (51.9) | (52.5) | (53.0) | |

주: 1) '22~'26년 계획: (2022년) 재정수입, 재정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본예산 기준

2) '23~'27년 계획: (2023년) 국회 확정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3)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의 방향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 혁신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재정혁신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등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대상 사업의 재검토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및 성과관리 강화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 변경 및 면제요건 구체화 등 예타제도 개편과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재정사업평가 단위 세분화 및 기금에 대한 주기적인 제도개선 또는 존치 여부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재정수입기반 확충 및 효율적 정비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부담금 제도 또한 정비할 계획이다.

④ 민간 역량 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수익성 확보 사업모델 개발, 사업방식 다변화 등)과 민간투자 신속 추진체계(사업초기 제안부담 완화 및 선제적 대상사업 관리 등)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국가 계약대가 현실화, 계약절차 부담 완화, 업체 권익보호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 처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마련,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이후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재정위험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02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전망

기획재정부는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1일(금)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화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관은 총 35개¹⁾이다.

'23~'27년 기간 중 35개 기관의 자산은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152.6조원 증가한 1,137.7조원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는 72.0조원 증가한 743.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수정계획²⁾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은 25.5%p 하락한 188.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 152.6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LH·도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고속도로 투자 지속 등으로 인한 SOC가 79.5조원, 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주택금융공사(특례보증자리론)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이 42.5조원, 송배전설비 확충 및 원전건설 확대 등으로 인한 에너지가 25.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채 72.0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SOC가 47.1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규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이 23.0조원 증가하고,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및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에너지가 0.9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대상임. 전년 39개 대비 4개 기관 감소(기타공공기관 전환으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사학연금 제외, 자산 2조원 기준 산업단지공단 제외, 마사회 추가)

2) 2022년에 수립한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34.1조원 규모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신규 8.1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하여 '22~'26년간 총 42.2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

표 1 전체 기관(35개) 자산, 부채, 부채비율 실적(2022년) 및 전망(2023~2027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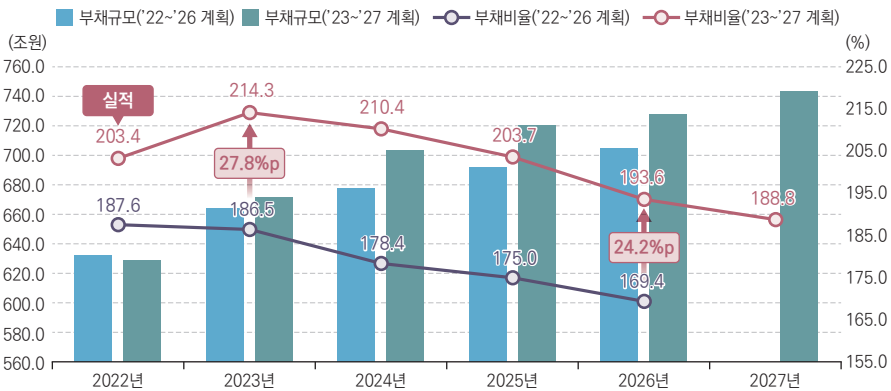
| 구분 | | 2022년 (실적) | 2023년 (A)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B) | 증감 (B-A) |
|------------------------------|------|---------------|--------------|--------|--------|--------|--------------|-------------|
|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 (35개) | 자산 | 938.3 | 985.1 | 1037.8 | 1074.7 | 1104.0 | 1137.7 | 152.6 |
| | 부채 | 629.0 | 671.7 | 703.5 | 720.8 | 727.9 | 743.7 | 72.0 |
| | 부채비율 | 203.4% | 214.3% | 210.4% | 203.7% | 193.6% | 188.8% | △25.5%p |

출처: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3. 9. 1. 바탕으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작성

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지난해 계획 대비 비교

전년도 계획('22~'26년) 대비 올해 계획('23~'27년)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27.8%p 상승했고, 2026년 기준 24.2%p 상승했으며, 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 8월) 등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5개 기관³⁾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최근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전망이 지난해 계획 대비 증가⁴⁾한 것에 기인한다. 두 공사를 제외한 기관들의 2023~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 규모·비율 전년도 계획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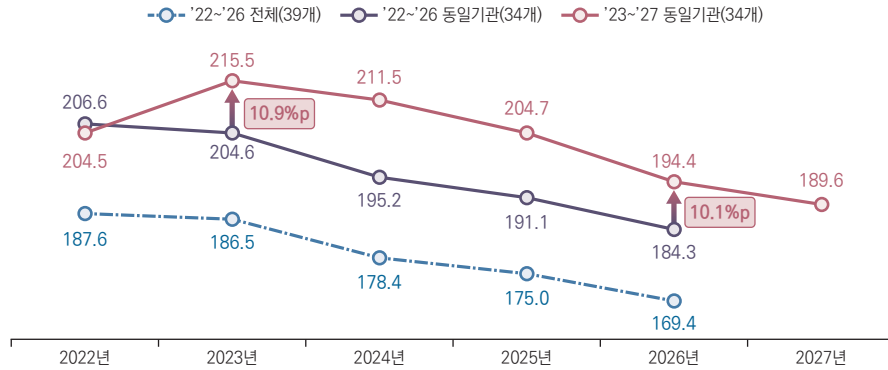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3. 9. 1. 바탕으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작성

3) 제외된 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8.8%로 양호

4)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부채가 급증하여 지난해 계획 대비 부채비율 증가

한편 전년 대비 대상 기관 변동(5개 제외)을 고려하여 작년과 올해 계획을 모두 작성한 34개 기관(이하 '동일기관(34개)')의 작년 계획 대비 올해 계획의 부채비율을 비교해보면 2023년 기준 10.9%p 상승, 2026년 기준 10.1%p 상승으로, 작년 전체 기관 부채비율 증가폭에 비해 그 격차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 2 동일기관(34개) 부채비율(%) 전년도 계획과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보도자료, 2023. 9. 1.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다.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등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기관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 2022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¹⁾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

가. 공기업 재무성과

2022회계연도 36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87.1조원으로 전년 대비 38.7조원(26.1%↑)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2조원 감소하여 △26.4조원으로 적자전환하였고, 당기순손실 역시 21.8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1조원 악화되었다. 기타포괄손익은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²⁾ 손익은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단위: 억원)

| 유형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영업수익(매출) | 1,334,489 | 1,483,728 | 1,871,110 |
| 영업손익 | 69,081 | 7,145 | △264,479 |
| 당기순손익 | △6,492 | △16,989 | △217,544 |
| 총포괄손익 | 18,382 | △11,765 | △175,680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2022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당기순이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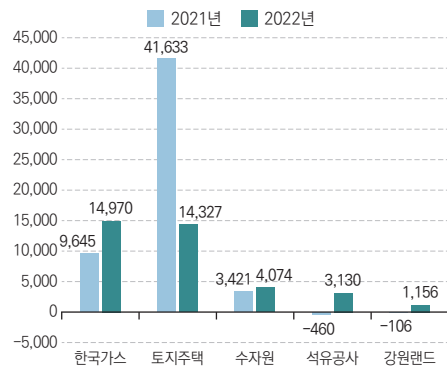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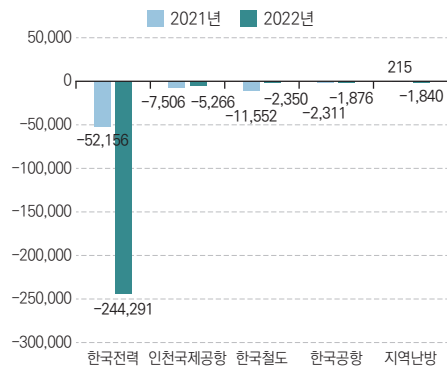


그림 2 당기순이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집계에서 제외(이하 동일)

나.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2회계연도 공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물량 및 단가 상승,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38.7조원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은 21.8조원으로 전년 대비 20.1조원 확대되었다. 이는 국제 연료가 상승 등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한국석유공사가 흑자전환하였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가 심화되었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 구분 | 기관 | 당기순이익 | | | 내역 |
|----|--------|---------|----------|----------|--|
| | | 2021년 | 2022년 | 증감 | |
| 증가 | 한국철도공사 | △11,552 | △2,350 | 9,202 |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운송수익 및 다원수익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고, 세법 개정 등에 따른 법인세수익 증가, 자산처분 이익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 폭 축소 |
| | 한국가스공사 | 9,645 | 14,970 | 5,325 |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판매단가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판매물량 증가 등 매출 증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 | 한국마사회 | △3,480 | 973 | 4,453 |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중단되었던 경마 시행 재개에 따라 마권매출 증가 및 입장권 매출 증가 등으로 매출 증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
| 감소 | 한국전력공사 | △52,156 | △244,291 | △192,135 | 전력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국제 연료가 급등,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 등으로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가 크게 증가하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확대 |

표 2 의 계속

| 구분 | 기관 | 당기순이익 | | | 내역 |
|----|----------------------|--------|--------|---------|--|
| | | 2021년 | 2022년 | 증감 | |
| 감소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41,633 | 14,327 | △27,306 |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임대사업 분양전환 매출 감소 및 분양토지 매출 감소 등으로 매 출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 및 당기 순이익 감소 |
|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 3,620 | △1,126 | △4,746 | 보증료할인이 종료되어 보증료수익이 증가 하는 등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개인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기록 |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다. 공기업 재무상태

2022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725.2조원으로 전년 대비 66.7조원 증가(10.1%)하였고, 부채는 5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79.3조원 증가(18.3%)하였다. 공기업 자산은 주로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과 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 및 부동산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교통수송 부문의 건설 중 자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종업원급여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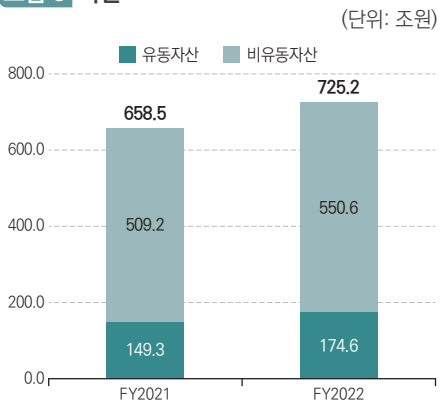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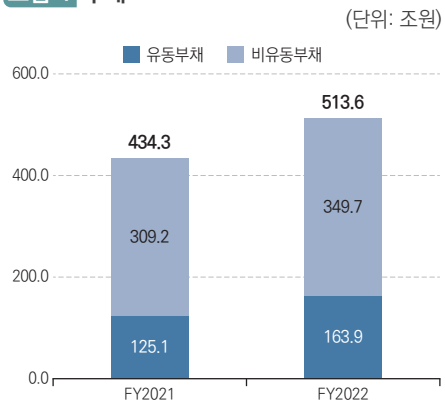


그림 4 부채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36.5%)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7.7%)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5%)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6.9%)와 장단기 매입채무(11.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자산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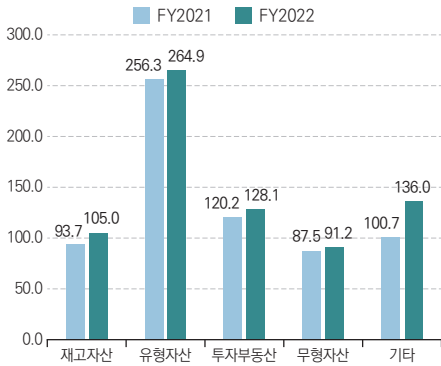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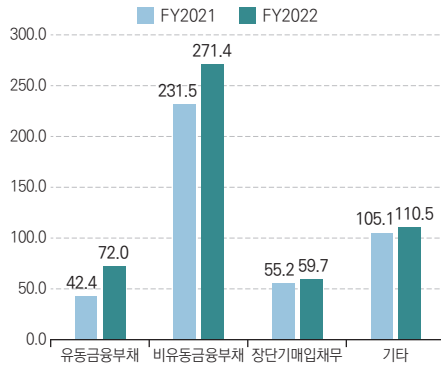


그림 6 부채 구성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부동산 등이 전체 공기업 자산의 61.8%를 차지한다.

그림 7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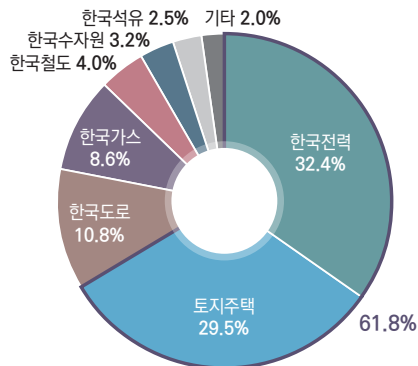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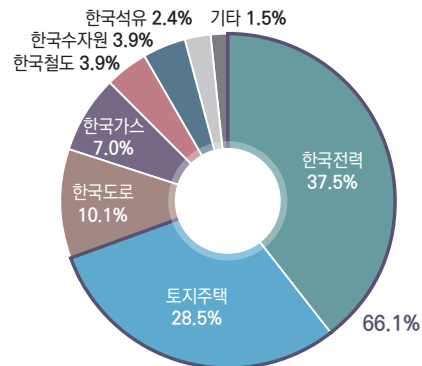


그림 8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라.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1)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2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66.7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및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인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및 원전해체복구 등 충당부채 증가, 한국가스공사의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비 미수금 및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9.3조원 증가하였다.

표 3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 구분 | 기관 | 자산 | | | 내역 |
|--------|----------|-------|-------|------|--|
| | | 2021년 | 2022년 | 증감 | |
| 증 가 | 한국 전력 | 211.1 | 234.8 | 23.7 | 연료가 상승 영향으로 원재료 등 재고자산 증가(2조 3,226억원), 판매량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증가(2조 3,394억원),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4조 7,307억원), 이연법인세자산 증가(9조 324억원) |
| | 가스 공사 | 43.7 | 62.4 | 18.7 |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미수금 증가(9조 908억원), 매출채권 증가(4조 6,556억원), 재고자산 증가(4조 398억원) |
| | LH | 201.7 | 213.6 | 11.9 | 분양자산 판매 대비 투자 증가로 재고자산 증가(4조 8,761억원) 및 임대자산(투자부동산) 증가(7조 1,793억원), 기타자산 감소(△566억원) |
| | 도로 공사 | 73.4 | 78.3 | 4.9 | 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1조 4,200억원) 및 건설 중 노선 증가로 인한 건설중인자산 증가(2조 5,802억원) |

표 3 의 계속

| 구분 | 기관 | 자산 | | | 내역 |
|----|-----------|-------|-------|------|--|
| | | 2021년 | 2022년 | 증감 | |
| | 수자원 공사 | 23.4 | 23.2 | △0.2 | 금융부채상환으로 현금성자산 및 금융자산 감소(△323억), 분양 등 재고자산 감소(△751억) 및 대규모 대행사업 정산으로 인한 선금금 감소(△491억) |
| 감소 | 석유 공사 | 18.4 | 18.3 | △0.1 | 감가상각 및 손상 등에 의한 석유개발자산 감소(△4,254억원) 및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증가(3,423억원) 등으로 자산 감소 |
| | 조폐 공사 | 0.6 | 0.6 | △0.0 | 금융차입금 및 매입채무 등 상환을 위한 현금성 자산 감소(△306억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신규 자산 취득 감소로 유·무형자산 감소(△234억원) |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 차입금 및 사채

2022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전년 대비 68.8조원 증가한 341.4조원으로 부채의 많은 부분(66.5%)을 차지한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47.1%로 민간 30.2%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 에너지 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191.5조원으로 전년 대비 57.9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연료가 상승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금 및 사채가 40.1조원 증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가 16.7조원 증가하였다.

공기업 부동산 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81.7조원으로 전년 대비 6.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사채 발행 증가,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증가 등에 기인한다.

교통·수송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67.5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 증가하였는데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사채 증가 등의 영향이다.

그림 9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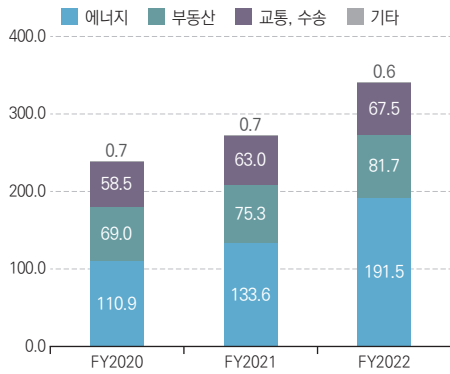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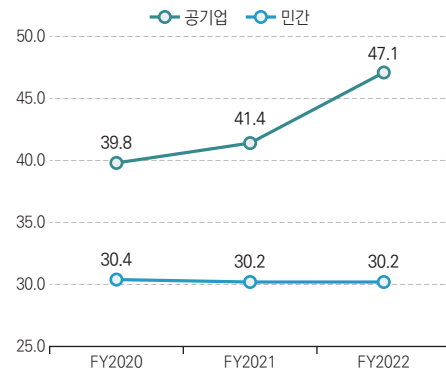


그림 10 차입금의존도³⁾ 추이 민간 비교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한국은행, 「2021년 기업경영분석」, 2022. 12.

마.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2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23.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출자금의 60.7%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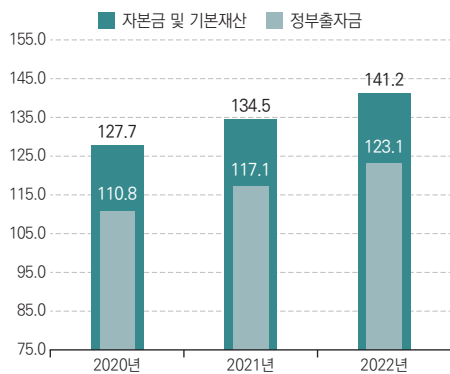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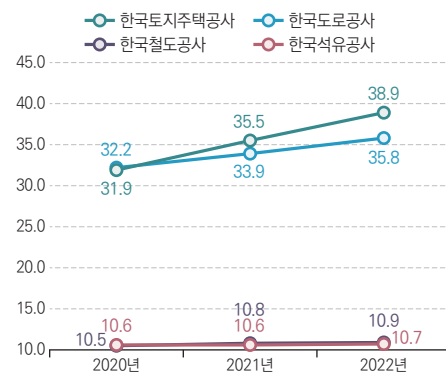


그림 12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3) 차입금 의존도=(차입금+사채)/총자본, 2022회계연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21년 수치 적용

2022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64.3% 감소한 4,314억원으로 총 8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 감소 및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한 배당 미 실시 등으로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7,754억원 감소하였다.

그림 13 공기업 배당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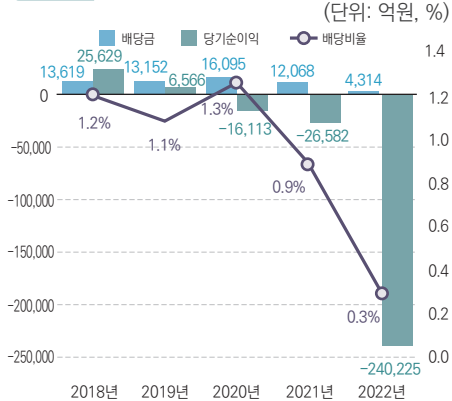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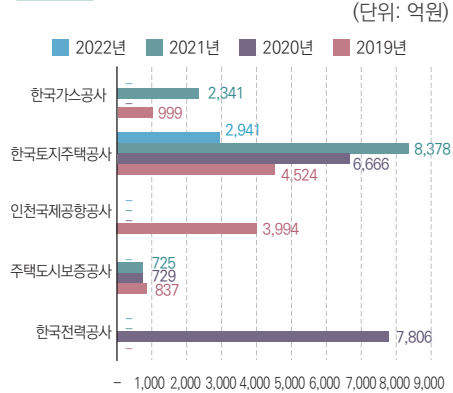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3. 9. 30.

바.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2회계연도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고유가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재료비가 급등하여 영업손실이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4.6%p 크게 하락하였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10.5%p 하락하였다.

대표적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49.0%p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의 실적 악화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심화된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였고, 차입금 및 사채가 증가하는 등 총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25.6조원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증가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19.8%p 감소한 9.1%를 기록하였다.

표 4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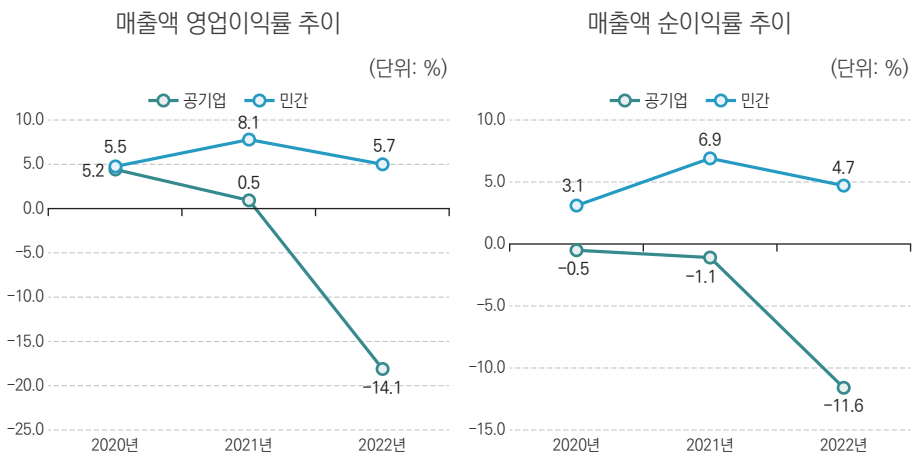
| | 구분 | 2020년 | 2021년(a) | 2022년(b) | 증감(b-a) |
|-----|-----------------------------|-------|----------|-----------------|---------|
|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5.2 | 0.5 | △14.1 | △14.6 |
| |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 △0.5 | △1.1 | △11.6 | △10.5 |
| 안정성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 182.3 | 193.7 | 242.7 | 49.0 |
| |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 145.6 | 10.3 | - ¹⁾ | |
| 생산성 |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 32.9 | 28.9 | 9.1 | △19.8 |
| |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 21.9 | 23.1 | 27.0 | 3.9 |

주: 1) 이자보상비율은 부(-)의 값으로 표시하지 않음

출처: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공기업 결산서(I)」 20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을 민간기업과 비교한 결과 공기업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확대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다.

그림 15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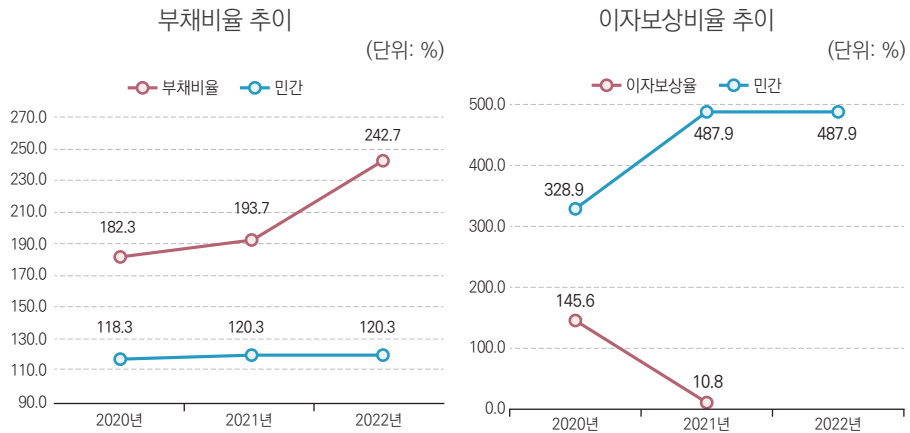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⁴⁾ 중 연결기준 주요 재무정보 재구성

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3. 4. 5.

2022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상승하여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으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6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주: 2022회계연도 민간 부채비율은 2021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1년 기업경영분석」, 2022. 12.

주: 2022회계연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21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1년 기업경영분석」, 2022. 12.

04 2022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 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을 수행하고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대상 준정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90개 기관이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 결과를 분석하였다.

2022회계연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301.7조원(전년 대비 11.2조원, 3.8%↑), 부채는 241.7조원(전년 대비 △0.6조원, 0.2%↓)이고, 영업수익은 261.8조원(전년 대비 +48.4조원, 22.7%↑), 당기순이익은 9.8조원(전년 대비 3.3조원, 50.1%↑)을 기록하였다.

가. 자산과 부채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준정부기관 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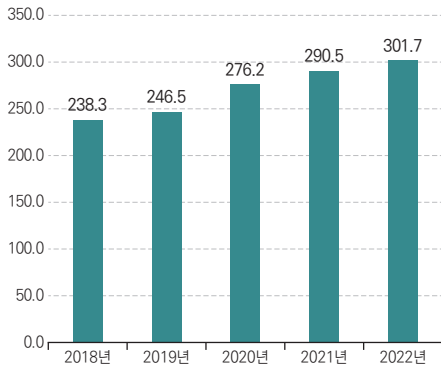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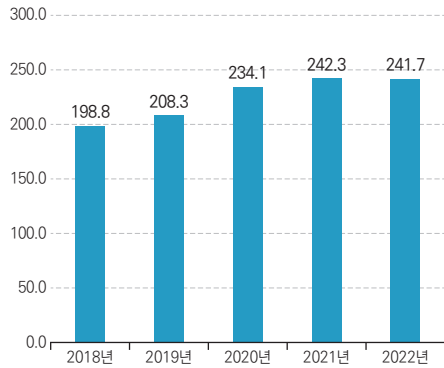


그림 2 준정부기관 부채

(단위: 조원)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현금및현금성 자산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총자산 변동액(11.2조원) 중 51%(5.7조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변동에 따른다. 한편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3.5%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3.9%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파산배당금의 수입으로 특별계정 발행채권 상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비 조기 지급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충당부채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나. 영업수익과 당기순이익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준정부기관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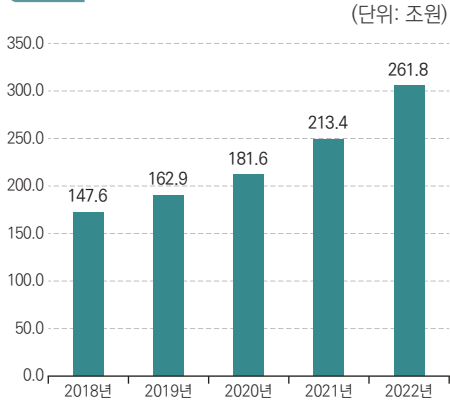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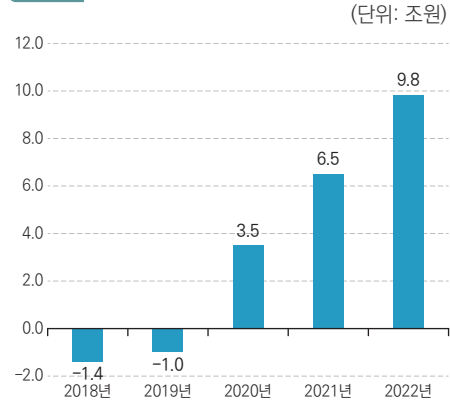


그림 4 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가입자 수 증가 및 보수월액 상승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8년 57.8조원, 2022년 86.1조원으로 28.3조원 ↑), 국민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의 출연금수익도 증가하였다(2018년 21.3조원, 2022년 34.7조원으로 13.4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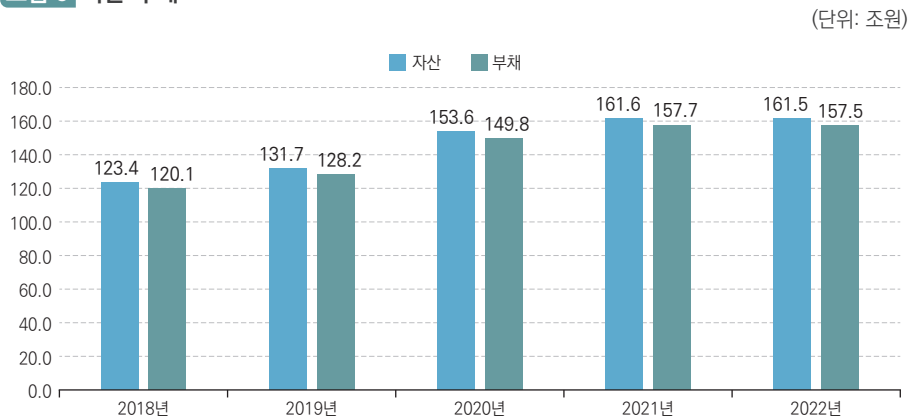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고, 2022년 9.8조원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당기순이익 변동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라 개인위생이 강화되면서 병원방문 횟수가 크게 감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2019년 △3.6조원, 2022년 +6.5조원으로 코로나19 이후 +10.2조원 ↑).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은 161.5조원, 부채는 157.5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3.5%, 총부채 중 65.1%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자산·부채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지급 등에 따른 예치금 및 유가증권의 감소로 자산이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부채는 채권시장 불안정에 따른 유동화증권(MBS, MBB)의 발행 축소로 차입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6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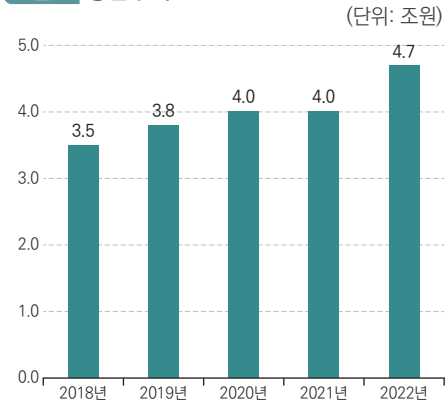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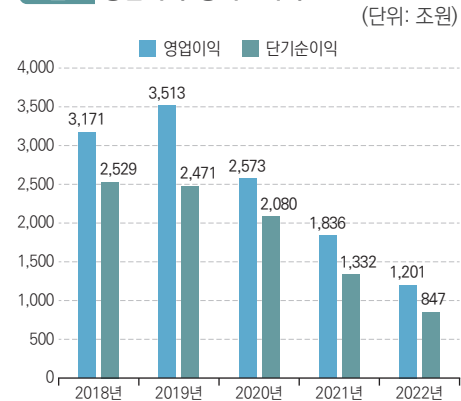


그림 7 영업이익·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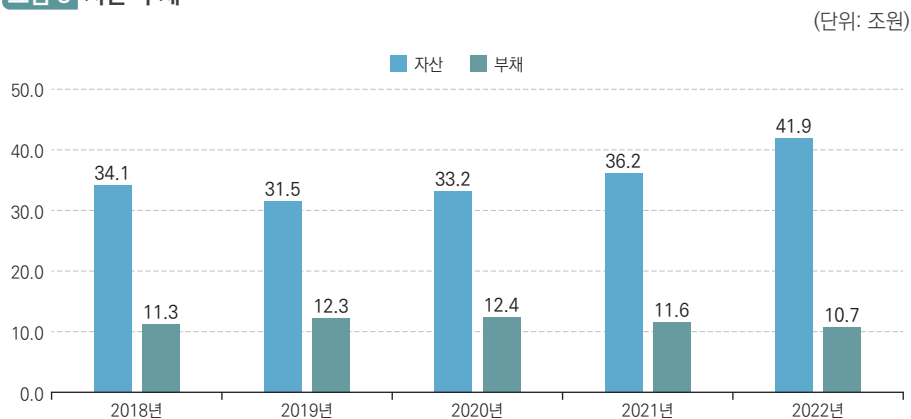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채권 규모 증가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수익의 증가로 영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비용 증가와 차입부채의 증가에 따라 늘어난 이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41.9조원, 부채는 10.7조원으로 준정부 기관 총자산 중 13.9%, 총부채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자산·부채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로 자산은 감소하고,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방문 횟수가 감소하는 등 202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개선됨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9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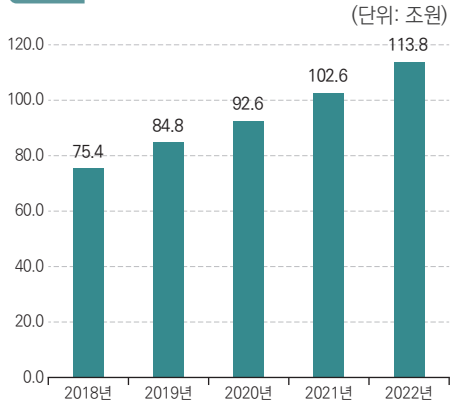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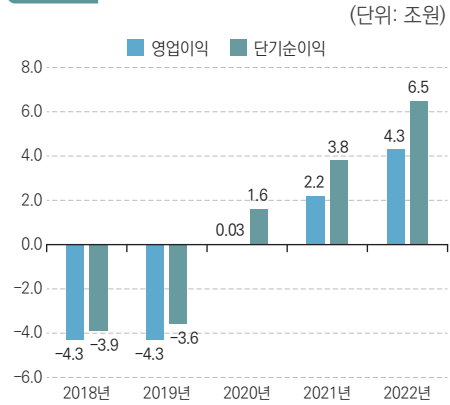


그림 10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상승 및 보험요율 증가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신속항원검사 및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비용 지원에 따라 영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개인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병원방문 횟수 감소 등으로 2020년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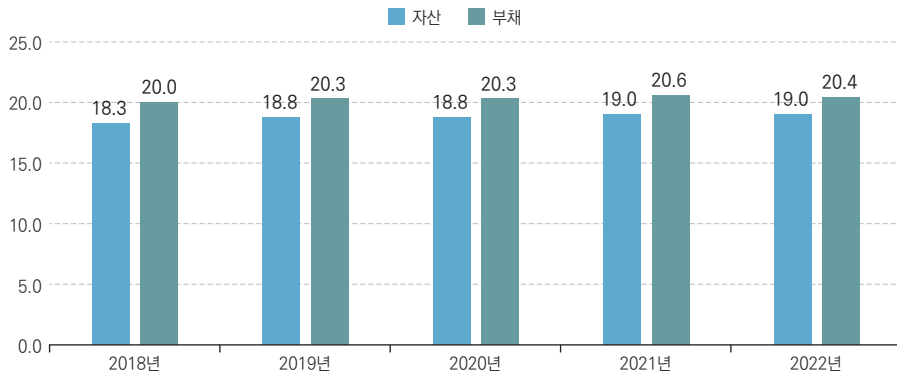


3) 국가철도공단

2022회계연도 국가철도공단의 자산은 19.0조원, 부채는 20.4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6.3%, 총부채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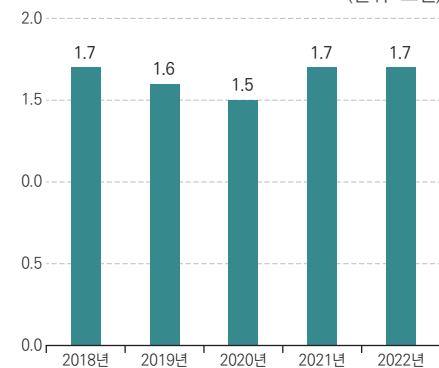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자산(2022년 기준 96.2%)으로,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2년에는 사채상환 및 금융자산 감소로 자산, 부채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12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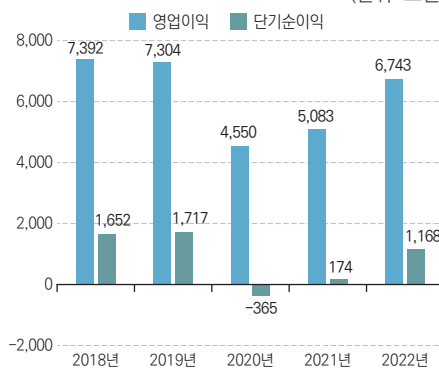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13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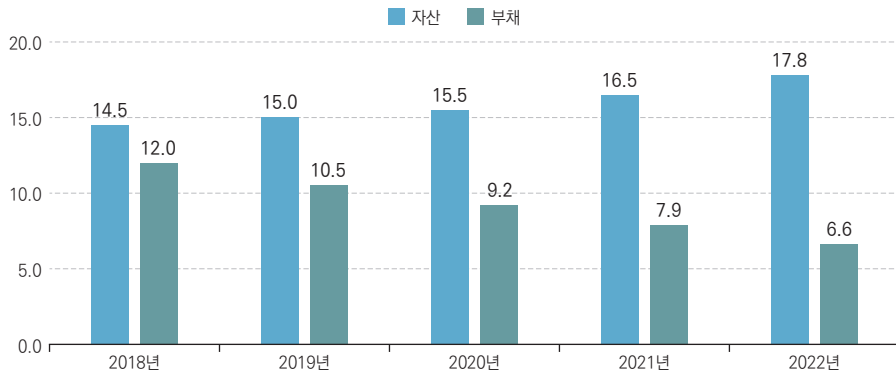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50~65%를 공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철도운영사(코레일, SR(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철도선로사용료로 징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로사용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60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34억원 증가하였다.

4) 예금보험공사

2022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17.8조원, 부채는 6.6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9%, 총부채 중 2.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용자산을 늘려 자산은 증가하고, 발행채권 상환을 통해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5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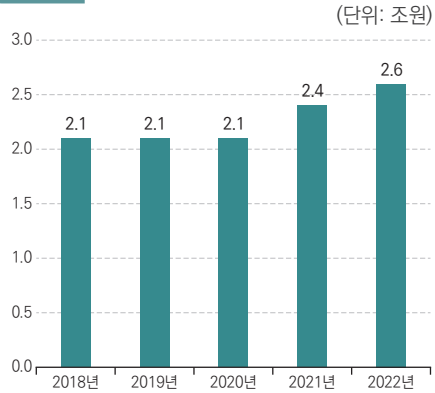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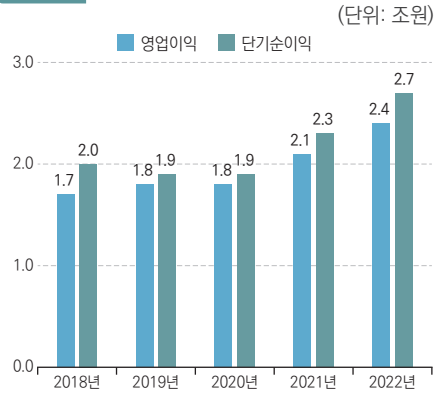


그림 16 영업이익·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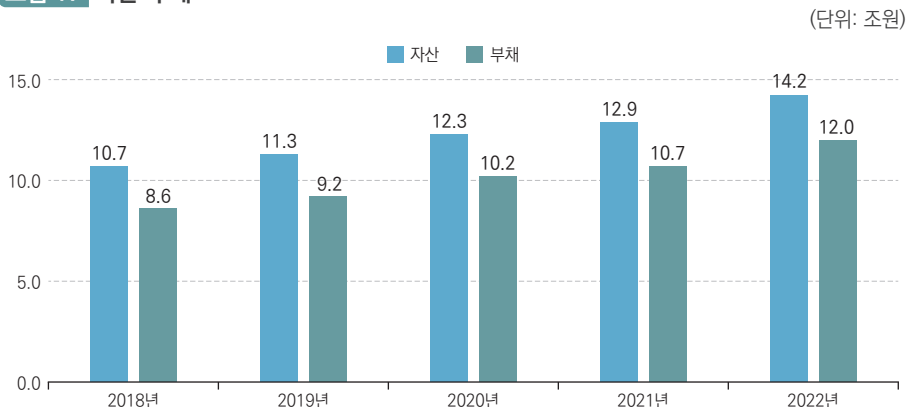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예금 잔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수령하고 있다. 부보예금 평균잔액 증가로 보험료수익이 증가하는 등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금융부채의 지속적 상환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하여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부보예금평균잔액 증가로 보험료수익 증가,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하였다.

5) 한국농어촌공사

2022회계연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은 14.2조원, 부채는 12.0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7%, 총부채 중 5.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자산·부채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8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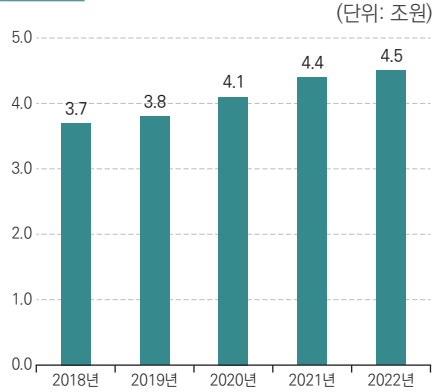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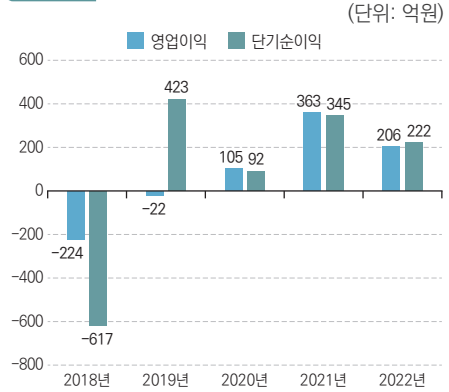


그림 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촌뉴딜사업 및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8년에는 생산기반사업 등 매출 감소와 법인세추납액 등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영업수익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 공사비도 증가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57억원, 123억원 감소하였다.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최종보고회 개최

01 2023년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는 지난 7월 27일(목)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8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및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등을 개정하였다.

가.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무지출액에 미달한 금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한정)를 부과하였다.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증여세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되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지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지출액에 미달한 금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을 최근 3개년도에서 최근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으로 변경하고, 지출실적 산정기준도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과 직전 4과세연도를 합한 5년 평균 사용실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현행 | 개정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 목적사업 지출 의무 • 의무지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지출실적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 분 증여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 시 제재 합리화 • (좌동)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① or ②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②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제재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나.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감리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업무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다.

| 현행 | 개정안 |
|--|--|
| <p>■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p>■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좌동) • (좌동) |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02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최종보고회 개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표준서식과 더불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및 주석도 공시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석 작성 경험이 있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석 작성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공익법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위탁하였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을 위한 주석 표준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다.

「공익법인 주식 표준안 도입방안」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을 위해 표준 주석 서식과 주석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를 마련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필수적 주석 기재사항 및 공익법인이 주로 작성하는 주석사항을 고려하여 표준 주석 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주석 작성할 때 각 항목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도 추가하였다. 또한 표준 주석 서식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등 국세청에서 표준 주석을 운영 시 참고할 사항까지 반영하였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센터 동향



-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 센터 연구 진행 동향
- 2023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보고회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월 1일에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정부소비지출에서의 탄소발자국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기준과 보고 촉진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기조연설로 Serdar Yilmaz, World Bank,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랙티스 매니저가 공공부문 기후 관련 ESG 보고 기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기준 개발에 대한 시사점과 공공부문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공공부문의 ESG 보고 기준 논의 배경과 공공부문 ESG 보고 기준 개념체계 및 미국의 ESG 보고 기준 제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ESG 보고 기준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뒤이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부문의 ESG 공시 현황과 평가제도 구축 방안 및 공공부문의 ESG 보고 사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공기업·공공기관의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과 에너지 및 금융 등 주요 분야별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보고 사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기후 관련 ESG 보고 기준 마련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준 제정 기관 등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기준 마련과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방향 및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ESG 정책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후 관련 ESG 보고 기준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The 4th KIPF Public Sector Accrual Accounting International Symposium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In Search of Climate-related ESG Reporting in the Public Sector

2023. 11. 1. (수) |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행사개요

-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14:00 ~ 17:4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YouTube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주제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림 1 의 계속

프로그램

사회자 |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 | | |
|----------------------------|--|--|
| 13:30~14:00 | 등 록 | |
| | 개회식 | |
| 14:00~14:25 | 개회사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 | 축사 | 주대영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김안희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기조연설 | | |
| 14:25~14:40 | Serdar Yilmaz (World Bank, 공공재정·조달 부문 프렉티스 매니저) | |
| 주제발표 | | |
| 세션1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기준 개발 | | |
| 14:40~15:30 | 발표 1.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개발: 보고실체를 중심으로 Andreas Bergmann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교수 | |
| | 발표 2. 미국 공공부문의 기후관련 ESG 보고 지침 및 시사점 Scott Showalter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교수 | |
| 15:30~15:40 | 휴 식 | |
| 세션2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촉진 방안 | | |
| 15:40~16:30 | 발표 3. 공공부문의 ESG 공시와 평가제도 구축 방안 한동숙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 | 발표 4.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사례 심규현 한국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정기중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부장 이지현 국민연금공단 책임운영역 | |
| 16:30~16:40 | 휴 식 | |
| 종합토론 | | |
| 16:40~17:30 | 좌장 |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 | 토론 | 김수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장 |
| | | 박혜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경제조정국 서기관 |
| | | 이용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장 |
| | 이보화 PwC삼일회계법인 ESG Platform 파트너 | |
| 17:30~17:40 | 질의응답 및 폐회 | |

참여방법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홈페이지(<https://gafsc-seminar.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 또는 참여 신청하기 클릭

참여 신청하기 Click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공공기관연구센터
Tel 044-414-2403 Email jyilm@kipf.re.kr

센터 연구 진행 동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T(이하 '회계연구TF')는 연구과제의 발굴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한편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고 및 연구과제의 성과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국가 간 MoU 체결 및 해외 공동연구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제1회(2020년)는 「국가별 공적연금 회계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제2회(2021년)는 「재정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역할(재정위험과 자산·부채 관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3회(2022년)는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23년 11월 우리 센터는 제4회 국제심포지엄으로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를 주제로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비교 가능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1, S2 최종본을 2023년 6월에 발표하였고, 공공부문에서는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에서 2023년 3월, 기후 공시 프로젝트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기조와 함께 우리 센터 역시 공공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ESG 보고 기준 개발과 ESG 보고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을 정부회계학회의 『정부회계연구(2023. 8.)』에 게재하였으며, 현재 '민간 및 공공의 기후대응 공시현황 파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보고 현황 및 방향성에 대해서도 후속과제를 준비 중이다.

회계연구TF는 관련 연구에 더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3차에 걸쳐 수행하였다. 1차 세미나는 2023년 2월 15일에 개최되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를 주제로 새롭게 제정되는 국제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S1과 S2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 세미나는 2023년 4월 6일에 개최되었으

며,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를 주제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실무적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3차 전문가 세미나는 2023년 7월 13일에 개최되었으며,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를 주제로 지속가능 보고의 실제 적용기준과 지침을 담고 있는 탄소회계와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구체적 지침을 살펴보았다. 즉, 1차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국제적 보고기준을, 2차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보고기준 실무현황을, 3차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실제 적용기준과 구체적 지침을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정부회계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변천: 8개 회계·세무학회 게재된 정부회계 관련 연구중심’이다. 이 연구과제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회계 연구 내용 및 과정의 궤적을 추적하고자 8개 회계·세무학회의 회계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향후 회계연구의 방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조사 및 분석의 과정에 있으므로 좀 더 분석을 진행하여 4분기(겨울호)에 소개하려고 한다.

회계연구TF의 주요 연구내용과 진행현황을 참조하여 관심이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¹⁾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표 1 회계연구TF에서 진행 중인 연구 및 세미나 현황(2023년 9월 기준)

| 구분 | 연구과제명 | 연도 | 연구 및 참여 |
|----------------|--|----------|--------------------------|
| 기본 |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결산검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 '23. 하반기 | 양은주 윤영훈 |
| 연구 진행 과제 | 정부회계 관련 연구내용 분석 - 8개 회계·세무학회 게재된 정부회계 관련 연구중심 | '23. 하반기 | 박성진 양은주 이정미 임지윤 |
| | 민간 및 공공의 기후대응 공시현황 파악과 추진방향 | '23. 하반기 | 이정미 임지윤 |
|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23. 하반기 | 이정미 |

1) 센터소개 의견제안란에 관심 있는 연구과제의 제안을 부탁드립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ipf.re.kr/bbs/gafsc_center_Proposal.do;jsessionid=97FCCDDB5B6139B3F2F0373F2C06F07F

표 1 의 계속

| 구분 | 연구과제명 | 연도 | 연구 및 참여 | |
|----------|----------|---|--------------------------------------|------------------|
| 연구 진행 과제 | 증장기 | 재정사업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 '23~ | 양은주 |
| | 자체 | 공기업 이익 조정 | '23. 하반기 | 양은주 |
| 발표 | 자체 (발표) | 재정정보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 '23. 하반기 (정부회계학회: '23. 5. 11.) | 양은주 |
| | 자체 (발표) |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재무적 설명요인 분석(후속연구 준비 중) | '23. 하반기 (정부회계학회: '23. 5. 11.) | 이정미 |
| | 자체 (발표) | 재정준칙이 일반정부 부채와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저량-유량 조정 중심으로 | '23. 하반기 (한국회계학회: '23. 6. 26.) | 윤영훈 |
| 세미나 | 자체 (세미나) | 제1차 전문가 세미나(이웅희 회계기준원 센터장)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 '23. 2. 15. | 센터 |
| | 자체 (세미나) | 제2차 전문가 세미나(정준희 대구대 교수) 국내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의 이해 | '23. 4. 6. | 센터 |
| | 자체 (세미나) | 제3차 전문가 세미나(정석우 교수 발표)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 '23. 7. 13. | 센터 |
| | 국제 (세미나) |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 | '23. 11. 1. | 합동 ¹⁾ |

주: 1) 합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최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후원함. 참석은 World Bank, 기획재정부, 회계기준원, 공공기관 등 전문가 참여



2023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8월 23일에 센터의 2023년 사업추진 중간실적을 보고하고자 2023년 제2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정책연구와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센터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전규안 교수(숭실대), 지현미 교수(계명대), 윤재원 교수(홍익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김동수 상무(삼일회계법인), 장우현 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참여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박성진 소장, 문창오 부소장, 윤영훈 국가회계연구TFT 팀장, 진태호 국가회계팀장, 윤성호 결산교육팀장,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이 참여하였다.

보고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팀별 사업추진 중간보고 안전에서는 팀별 중복 업무에 대한 통합 방안,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점검 시사점 도출 및 공공부문 ESG 보고 관련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 점검 시, 기관 전반의 취약 부분을 확인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나. 회계기준 관련 업무가 국가회계팀과 재정통계팀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 방안 고려 필요
- 다. 공공부문 ESG 보고 관련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 4회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기후대응 관심도 제고 기대

또한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수렴되었다.

가. 센터 인력 부족 관련,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 유형 다양화 및 국제기관 파견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필요

나.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 역량 증대가 필요하며, 센터의 연구 외연 확장을 위한 연구 인력풀 확충 및 학회 교류 확대 필요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취합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 계획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년 제2회 자체평가위원회(2023. 8. 23.,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운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보고회를 2023년 8월 4일(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2022년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해 수준별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수요를 고려해 기존 교육과정에 고급회계 과정을 추가하여 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고 회계담당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가 교재 개발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재 개발에서는 ‘법인세회계’,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등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교재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방민식(이촌회계법인) 회계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여 8월 말 교재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교재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K-IFRS 내용과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사례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최종 결과물은 2023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 사용할 예정이며, 수강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담당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를 기획재정부 업무연락포탈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서는 2022년 교육운영 시 교육내용에 비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일수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커리큘럼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특수회계·고급회계 등 수준별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에 ‘법인사회계’,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총 4회차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9~11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세종에서 1회(세종컨벤션센터), 서울에서 3회(섬유센터, 서울중부센터, 은행회관) 실시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의 교육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지만 2023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변경된 기관들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교육일정

| 차수 | 지역 | 일정 | 시간 | 장소 | 수용인원 |
|----|----|-----------------------|----------|---------------|------|
| 1차 | 세종 | 9. 20.(수)~9. 22.(금) | 3일(21시간)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00 |
| 2차 | 서울 | 10. 11.(수)~10. 13.(금) | 3일(21시간) |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 110 |
| 3차 | 서울 | 10. 25.(수)~10. 27.(금) | 3일(21시간) |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 120 |
| 4차 | 서울 | 11. 8.(수)~11. 10.(금) | 3일(21시간)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90 |

표 2 교육 커리큘럼

| 일자 | 교육 과목 | 시간 | 주요 내용 |
|---------------|------------------|-------------|--|
| 1일차 (7.5H) |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 09:30~12:00 | 회계의 기초 재무제표의 종류 회계순환과정 |
| | 유무형자산 및 리스 | 13:00~15:30 | 유무형자산 사용권자산(리스) |
| | 수익 | 15:30~16:30 | 수익인식모형 수익인식 회계처리 |
| | 채권,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 16:30~18:00 | 화폐의 시간가치 채권, 총당부채, 우발부채 |
| 2일차 (7.0H) | 정부보조금 | 09:30~11:00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
| | 종업원급여 | 11:00~12:00 |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
| |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 13:00~16:00 |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
| | 연결재무제표 | 16:00~17:30 |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습 연결재무제표 주요 이슈 별도재무제표 |
| 3일차 (6.5H) | 현금흐름표 | 09:00~10:30 | 현금흐름표의 의의 현금흐름표의 내용 현금흐름표 작성 실습 현금흐름표 주요 이슈 주석공시 |
| | 법인세회계 | 10:30~12:00 | 법인세회계의 의의 법인세주석 작성 실습 법인세회계 주요 이슈 |
| | 결산서 작성방법 | 13:00~14:00 | 결산개요 회계처리, 결산, 주석작성 유의 사항 |
| |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 14:00~16:30 |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이 9월 20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1차 교육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교육생들 약 60명이 참석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일차에는 송실대학교 전규안 교수가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회계의 기본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며, 이어 세종대학교 선우희연 교수, 홍익대학교 한승엽 교수가 '유·무형자산 및 리스', '수익, 채권,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2일차에는 순천대학교 엄기중 교수가 '정부보조금, 중업원급여'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어 최연식 교수가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3일차에는 이촌회계법인 방민식 회계사가 현금흐름표, 법인세회계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지영 회계사, 이정회계법인 허용 회계사가 '결산서 작성방법' 및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차(2023. 9. 20.~22.,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가회계
재지통계



세미나



- 제3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제3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주 제: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4:00~16:00

발표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우 교수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관 8층 중회의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2023년 제4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 기후변화 ESG 보고」로 정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차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제정되는 국제기준인 「IFRS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S1과 S2에 대해 살펴보았고, 2차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실무적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 보고의 실제 적용사례인 탄소회계와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기준과 지침을 살펴보고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우 교수를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¹⁾

가. 서론

2015년, UN은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전 지구적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했다. 17가지 목표 중 기후 관련 목표는 (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목표 13) 기후변화와 대응으로 들 수 있다. 이후, 2018년 IPCC는 글로벌 온난화 대응을 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및 빈곤 퇴치 노력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의 탄소배출의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 탄소²⁾회계³⁾

● 탄소회계 개념 종류

탄소회계 개념을 살펴보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재무정보, 탄소 배출량 측정 정보,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으로 설명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정보는 조직(기관)이 생산한 온실가스와 생산을 회피하였거나 제거한 온실가스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의 가치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회계기준으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와 2004년에 발표한 국제 회계기준 해설위원회(IFRIC) 3 “Emission Rights” 등을 들 수 있다.

- 1)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경제인연합회·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https://ghgprotocol.org/sites/default/files/2022-12/corporate-standard-revised_korean.pdf, 검색일자: 2023. 9. 21.
- 2) 탄소(CO₂)는 생산 활동에 배출되는 가장 일반적인 온실가스(GHG)로서 온실가스의 약칭으로 탄소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좀 더 정확한 용어로는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의미로서 CO₂_e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온실가스들의 지수를 적용하여 탄소의 배출로 변환하여 총량을 계산함
- 3)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는 일반적으로는 일련의 경제 내 기업이나 조직의 활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량화 및 계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를 회계적으로 표현하면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그 영향을 경영활동의 주요지표인 재무제표에 정량적, 계량적 형태의 지표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탄소회계 및 보고 기준

탄소배출 관련 보고 기준에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s, CDP)와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회계 기준 및 탄소 정보 공시 기준들이 있다. 먼저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기업에 탄소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했으며,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에는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프로토콜(2001년)과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2015년) 등이 있다. 탄소 정보 공시를 규정한 기준으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ASB),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TF(TCFD) 정보공시 세부지침, IFRS S2,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SEC 기후 관련 정보 공시 기준 등을 들 수 있다.

-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는 투자자, 기업, 도시, 주 및 지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글로벌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제비영리단체이다. 2002년에 48개 기업에 정보 공시를 요구했으며, 2015년에는 창립 파트너로 과학기반 이니셔티브(SBTi)를 설립했다. 그 이후, 2021년에는 2만 3천개 이상의 기업이 환경 데이터를 제출했다.

-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

과학 기반 목표 이니셔티브는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컴팩트(UNGC), 세계 자원 연구소, 세계자연기금(WWF)의 연합체이며, 주요 역할은 기업들의 1.5°C 절감 프로젝트에 맞춰, 탄소 중립 과학 기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독려하는 비즈니스 기후 행동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절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있다.

-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1998년,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는 공동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설립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국제표준으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 기준을 제공⁴⁾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고 확산한다는 목표하에 1998

4) GREENHOUSE GAS PROTOCOL, <https://ghgprotocol.org/about-us>, 검색일자: 2023. 9. 27.

년,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GHG Protocol Initiative)를 발족했다. 2016년,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활용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준

| 기준 | 개요 | 대상 |
|--|---|------------------|
| Corporate standard(2001, 2004) | 기업 수준 온실가스 인벤토리 ⁵⁾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및 지침 | 기업 및 기관 |
| GHG Protocol for Cities(2014) | 도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회계처리 및 보고 체계 | 도시 및 공동체 |
|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Standard(2011) | 전체 가치사슬의 배출 영향 평가 및 감축 활동 식별 기준 | 기업 및 기관 |
| Policy and Action Standard(2014) | 정책 및 활동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 | 국가 및 도시 |
| Product Standard(2011) |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배출량 식별을 위한 회계 및 보고 기준 | 기업 및 조직 |
| Project Standard(2005, 2011) | 기후변화 감축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편익 계량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정책 중립적 회계기준 | 기업 및 조직, 국가 및 도시 |

출처: 정석우, 「기후변화 관련 공시기준상 탄소배출 측정 이슈[발표자료]」, 2023. 7. 13.

온실가스 프로토콜 이니셔티브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과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 감축량 산정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5)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것을 말함

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⁶⁾

● 개념

사업자 수준의 기준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량화하고 보고하기 위한 단계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원칙(기준, 지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는 목적적합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및 정확성의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원칙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다.

표 2 1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원칙

| 원칙 | 내용 |
|-------|--|
| 목적적합성 | -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사업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사업 내·외부의 인벤토리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 완전성 | - 선택된 인벤토리 범위 내에서 모든 온실가스 배출원과 그 활동에서의 배출량을 산정·보고해야 하며, 제외된 배출원 및 활동사항은 공개하여 제외사유를 설명해야 함 |
| 일관성 | - 시간 경과에 따른 배출량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관된 조사 분석방법 사용 - 데이터, 인벤토리의 범위, 연구방법, 그리고 그 밖의 관련요소들의 변화를 시간경과에 따라 명확히 기록해야 함 |
| 투명성 | - 명확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모든 관련 이슈들을 객관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며, 모든 관련 가정을 공개하고 사용된 산정방법과 정보원을 명시해야 함 |
| 정확성 | - 판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수치가 실제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함 - 보고된 정보의 타당성에 대해 사용자가 이성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확성을 보장해야 함 |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제연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 7.

6)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 2장, 사업 목표와 인벤토리 설계(지침)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통해 달성되는 다섯 가지 사업 목표는 ①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및 감축 기회 규명 ② 공개보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프로그램 참여 ③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참여 ④ 온실가스 시장 진출 및 ⑤ 자발적 조기행동의 향후 인정이다. 목표별 상세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설명한다.

표 3 2장 사업 목표와 인벤토리 설계

| 원칙 | 내용 |
|-------------------------|--|
| 온실가스 리스크 관리 및 감축기회 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수반될 리스크 규명 - 비용 효율적인 감축 기회 규명 - 온실가스 목표 설정, 경과 측정 및 보고 |
| 공개보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프로그램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설정 경과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보고 - 온실가스 등록 체계 등 정부 및 NGO 보고 프로그램 참여 - 환경마크와 온실가스 인증서 |
| 의무적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역, 지방 차원의 정부보고 프로그램 참여 |
| 온실가스 시장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온실가스 거래 프로그램 지원 - 외부의 배출 상한, 거래할인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참여 - 탄소세 및 온실가스세 산정 |
| 자발적 조기행동의 향후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참여로 인한 기준선(Baseline) 배출량 및 크레딧(Credit) 지원 정보 제공 |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경제인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 11.



● 3장, 법인형태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기준, 지침)

사업자 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합하는 데 출자비율 기준(Equity Share Approach)과 통제력 기준(Control Approach)의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보고사업자가 대상 사업을 완전히 소유할 경우 조직범위는 어느 기준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부분소유(즉 공동 출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어느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직범위 및 보고대상 배출량이 달라진다.

먼저 출자비율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상사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 사업에 대한 출자비율(소유권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출자비율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에서 생기는 리스크와 이익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권리를 의미한다. 출자비율이 소유비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출자비율이 경제적 권리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사업과의 관계인 경제적실체가 법적 소유형태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도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통제력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통제력을 지닌 사업에서의 온실가스배출량만을 100% 산정한다. 지분(출자비율)을 갖지만 통제력을 갖지 않는 사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를 사용할 경우, 경영통제력(operation control)과 재무통제력(financial control)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

재무통제력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사업의 재무방침 및 경영방침을 지시하는 힘을 갖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해 재무통제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또는 자회사가 자신의 경영방침을 어떤 사업에 도입하여 실시할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업에 대하여 경영통제력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 4장,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기준, 지침)

소유권 및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직적 범위를 설정한 후, 사업자는 사업의 활동 범위를 결정한다. 이 작업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하여,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분류하고, 보고범위를 선정하여 직·간접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으로부터의 배출을 의미하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인한 배출이나, 다른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원천에서 발생한다. 무엇이 직간접적인지에 대한 분류는 조직적 영역 설정으로 선택된 통합 접근법(지분 공유 혹은 통제)에 의존한다.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목적상, 직·간접 배출 원천을 규명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다양한 조직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기후 정책 및 사업 목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 범위(Scope1, 2, 3)가 설정되었다.

표 4 온실가스 배출 범위(Scope) 개념

| 원칙 | 내용 |
|-------------------------------|--|
| Scope 1 (직접배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의미 * 전기, 열 또는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 보일러, 터빈 등 고정배출원의 연료연소로 발생 * 물리적, 화학적 공정에서 재료의 제조 및 처리 시 직접 발생 * 자재, 제품, 폐기물, 직접 운송 등으로 인한 배출 * 비산배출(Fugitive Emissions): 고의, 비고의적 누출 * 자가발전전력과 시멘트생산 및 철강생산으로 인한 배출은 Scope 1에 해당 |
| Scope 2 (간접배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구입한 전력을 소비할 때의 배출량을 의미하며, 청정전력이나 재생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배출량 저감 가능 * 전력생산공기업이 독립된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하고 송배전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송배전 시스템에서 소모되는 배출량 |
| Scope 3 (기타 간접 배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온실가스 간접 배출을 의미하며,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함 |

출처: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세계자원연구소(WRI)·FKI 전국제연연합회·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기준』, 2004, pp. 27~29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단, Scope 3의 정의가 쉽지 않으므로 구분을 위해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자의 가치사슬을 확인
- 2) Scope 3 분류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
- 3) 가치사슬에 입각한 사업 파트너를 식별
- 4) Scope 3의 배출량을 정량화

● 5장, 법인형태 및 배출원 변화에 따른 기준연도 및 배출량 재산정 방법(기준, 지침)

일관성 있고 유용한 시간경과별 배출량 비교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현재의 배출량과 과거 배출량을 비교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데이터는 기준연도의 배출을 근거로 해야 한다. 또한 시간별 배출의 일관성 있는 추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인수, 합병, 분할 등과 같은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을 시 기준연도의 배출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량 추적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기준연도 설정이다. 기준연도 설정 시 사업자는 검증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준연도를 선정해서 보고해야 하며, 그 특정연도의 선택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배출량을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유의한계(Significance Threshold)를 명시해야 한다. 유의한계는 데이터, 인벤토리 범위, 방법론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중요한 변화를 규명하는 데 사용되는 질적/양적 기준이다. 재산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기준연도 배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보고조직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 합병, 인수, 분할
 - : 배출활동의 아웃소싱과 인소싱
- 2) 기준연도 배출량 데이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경우
 - : 산정방식의 변화
 - : 배출계수 및 활동데이터의 정확성 향상 등
- 3) 중요한 오류 및 다수의 누적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 6장,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및 배출량 산정(지침)

인벤토리 범위가 설정되면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1) 온실가스 배출원 규명
-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선정
- 3) 사업활동 데이터 수집 및 배출계수 선택
- 4) 산정툴(tool) 적용
- 5) 사업자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집계

● 7장, 인벤토리 품질 관리(지침)

사업자는 인벤토리 향상, 이해관계자 요구, 규제대응 등 다양한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배출량의 산정보고 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준수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은 실질적인 프로그램 체제를 수립하는 기술적 측면을 수반한다. 또한 사업활동의 범위, 배출계수, 과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인벤토리 작성에 사용되는 방법, 데이터 과정, 시스템 및 측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투명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인벤토리 품질관리 시스템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한다.

- 1) 인벤토리 품질관리팀 구성
- 2) 품질관리 계획수립
- 3) 포괄적 품질점검 수행
- 4) 특정 배출원 카테고리의 품질점검 수행
- 5) 최종 인벤토리 측정과 보고검토
- 6) 공식 피드백 회로
- 7) 보고, 문서화, 기록보관 절차의 수립

● 8장, 온실가스 감축 회계처리(지침)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보고, 외부의 요구,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부의 제도 변화는 시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서 발생한 오프셋(상쇄)과 크레딧(감축실적) 산정 역시 매우 중요한 기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감소) 추적 시 제공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인수 및 부분매각, 폐점
- 2) 실제 저감량(효율성 증대 및 연료 대체)
- 3) 생산단계의 변화
- 4) 추정방법론 변화 등

온실가스의 오프셋(상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별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미하고, 그 예로는 Alcoa가 재생 가능 에너지 인증서(RECs)를 구입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를 상쇄한 사례가 있다. 크레딧(감축실적)은 통상적으로 배출저감사업 등의 활동에서 발생되며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도 전환 가능한 유동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그 사례로는 교토의 정서 청정개발체제(CDM)에 의해 발급되는 인증배출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들 수 있다.

● 9장, 온실가스 배출 보고(기준, 지침)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공개 보고는 다음과 같은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필수정보는 사업자와 인벤토리 범위에 대한 설명과 배출량 정보를 의미한다. 사업자와 인벤토리 범위에 대한 설명에는 통합접근법을 포함한 조직범위, 사업활동 범위와 보고 기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그리고 배출량 정보는 각 범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기준 연도, M&A 등 조직범위의 중요한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 틀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선택정보에는 배출과 성과에 대한 정보 및 오프셋 정보가 포함된다.

● 10장, 온실가스 배출 검증(지침)

검증은 보고된 온실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다. 사업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은 초기단계이나, EU ETS 체제에서 온실가스 검증자는 국가기관이 인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1) GHG 수행 경험 및 역량 검증
- 2) 산정방법론을 포함한 온실가스 이슈에 대한 이해
- 3) 사업활동과 산업에 대한 이해
- 4)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온실가스 배출 검증의 사례로는 PwC의 2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들 수 있다. 먼저 1단계로는 온실가스 산정보고 방법인 배출량 산정 기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평가하고, 2단계로 중대한 불일치를 규명한다.

● 11장, 온실가스 목표 설정(지침)

이 장은 기업이 어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감축 목표 설정단계, 결정사항, 결정의 적용 및 이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궁극적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 목표의 설정은 인벤토리 구축의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목표 설정 이유

- 1) 온실가스 리스크 최소화 및 관리
- 2) 비용 절감 및 혁신 촉진
- 3) 향후 규제 대비
- 4) 리더십과 기업의 책임 입증
- 5)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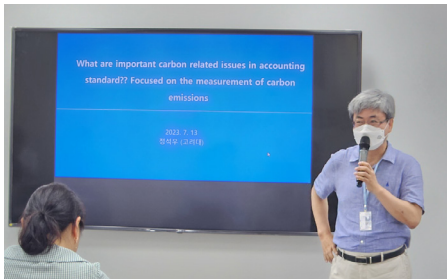
■ 온실가스 목표 설정의 단계

- 1) 고위 경영진의 의지 확보
- 2) 목표 유형 선택
- 3) 목표 범위 선택
- 4) 목표 기준연도 선택
- 5) 목표 완료기한 설정
- 6) 목표 공약기간 설정
- 7) 오프셋과 크레딧의 사용 여부 결정
- 8) 목표 중복산정 정책 수립
- 9) 목표 수준 결정
- 10) 진행 상황 추적 및 보고

라. 향후 과제

향후 기업의 탄소 배출 측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공시 기준하에서 탄소 관련 정보 공시 방법론 정립 필요
- 탄소 정보 측정에 GHG 프로토콜 기준 및 지침은 불충분하므로 자발 및 강제 지침 등의 구체적인 회계 기준 도입 필요
- 기업에 탄소시장의 탄소 관련 제도화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보다 상세한 제도 구상 필요
- 환경보호 목적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목적 등 탄소 배출 정보 활용의 목적 식별 및 조화 방안 마련
- 기업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탄소 절감 방안 확인
- 회계 분야의 탄소 배출 정보 공시에 대한 관심 및 노력 필요



2023년 제3회 원내 초청 세미나(2023. 7. 13., 본원 8층 중회의실)



오피니언



-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공공기관 ESG 공시에 대한 소고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국민을 향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에 의한 직접 활동 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 제공은 ‘예산’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통한 책임성 확보라는 재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의 운영 성과는 매년 국회를 통하여 심의·의결되는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적·공익적 활동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체계를 통하여 공개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정보공시는 재정관리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비재무적 정보의 공개 또한 중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국내외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 활동의 결과는 ‘ESG 공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1.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과 ESG 공시¹⁾

공공기관의 ESG 공시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ESG 트렌드를 반영하여 ESG 공시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SG와 관련된 주요 개정 및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 ESG 운영 대분류를 신설하는 등 기존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로 개편하였다. 4개의 대분류에는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가 포함된다.

둘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 및 항목 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대분류 아래에 현행 10개인 중분류를 15개로 세분화하였다. 15개의 중분류는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노동조합, 소송 및 자문, ESG 현황,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재무성과, 사업 및 투자, 중장기 재무관리,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이다.

셋째, ESG 공시를 강화하였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EU,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ESG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는 등 ESG 공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넷째, 기후공시(E, 환경) 강화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의 공시를 현행 직·간접배출(Scope 1·2)에서 외부배출(Scope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공공기관들의 준비를 감안하여 2023년에는 자율공시로 하되, 국제기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확정 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점검제도 개선」, 보도자료, 2023. 2. 3.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Alio) 전면 개편-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점검제도 개선」, 보도자료, 2023. 2. 3.

다섯째, 공공기관 ESG 공시 강화를 위해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S) 항목, 기관운영 투명성 및 ESG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보강이 필요한 지배구조(G)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사회(S) 항목에는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지배구조(G) 항목에는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등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여섯째,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2024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2. 공공기관 ESG 발전 방향

민간 기업의 ESG 공시기준은 ESG를 포괄한 의미로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으로 통합되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은 IFRS재단 산하 ISSB의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 EU의 CSRD/ESRS, 미국의 SEC 기후 관련 공시규정으로 수렴되었다. 이 중 ISSB의 IFRS S1, S2는 2023년 6월 26일에 확정, 발표되었고, EU의 ESRS는 2023년 7월 31일에 수정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미국 SEC 규정은 2023년 4분기 말까지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ESG 공시 로드맵도 2023년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ESG 공시기준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의 ESG 공시기준이 확대, 강화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직간접적으로 정부 당국의 통제를 크게 받는 공공기관의 공시기준에 ESG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ESG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ESG는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투자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에서 출발하였다. 넓은 의미의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은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ESG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SG는 지구의 기후 위기, 극심한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속가능한 존속이라는 대전제를 지키기 위하여 기업이 행동하여야 할 준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공기관의 비중 및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공공기관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민간기업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제 ESG가 경영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 제고는 경제적인 가치와 ESG를 중심으로 한 비재무적인 가치 모두를 통하여 창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온 경영효율의 극대화와 더불어 ESG 경영활동의 극대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ESG의 본질이 기업 및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ESG 정보 공시의 확대 및 강화를 반영한 기준 개정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여 ESG 공시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기준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ESG 중심 경영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기관들은 수도 많고 업종도 다양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한 ESG 공시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들은 공시기준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 각 공공기관에 적합한 내용을 적용하여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ESG 공시기준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 없이 펼쳐진다면 그 제도나 정책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고, 이런 제도나 정책은 오히려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ESG 열풍을 보며 다시 한 번 전문성, 담당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ESG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Scope 1, 2, 3의 측정 및 공시 규정을 보며 이를 공공기관들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경제적 자원이 풍부한 공공기관들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긴축 재정과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현재의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서 자원의 제약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준비를 감안하여 2023년에는 자율공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성 준비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민간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지속가능성공시기준에서도 Scope 3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ESG 활동 보고는 지속가능성공시기준에 따라 기록, 보고하고, 이후 ESG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하는데, 이 중간에 적격하고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기업의 ESG 보고에 대한 인증 절차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내의 ESG 관련 공시기준에 의하여 기록,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의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처럼 ESG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ESG 관련 사항은 공시기준에는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기준에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 ESG 중심 경영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공시기준에서 ESG 공시를 확대, 강화하는 기준이 나왔지만, 이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이 안 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ESG 공시가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본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실정에 맞게 ESG 중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공시기준에 맞게 기록, 보고하여 공공기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국민, 정부 당국 등도 공시기준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활동을 평가하여 이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규제나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의 본질적인 면에서 ESG에 접근하여야 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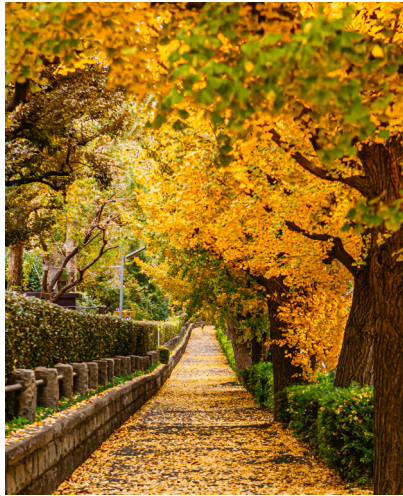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